

한편 양인목 특조단장은 “각 군의 1차 재조사 결과에 유족들이 수긍하지 않을 경우 특조단 차원에서 다시 재조사하겠다”며 “민간 자문위원들도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참여시키겠다”고 말했다.(1999. 3. 22. 한겨레신문)

## 5. 포리 무는 군 의문사

### 1) 군 의문사가 왜 생길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유족들이나 관련 단체, 군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수사 체계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한다고 지적한다. 초동수사 미흡, 수사의지 부족 등 수사과정의 여러 문제와 군에 대한 불신 등 유족의 심리적인 이유가 복합적으로 얽혀 일어난다는 것이다.

현재 군에서 사망사건이 나면 군 검찰의 지휘를 받아 헌병대 수사관들이 수사를 한다. 최근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군내 사망 의혹사건 줄속 수사 개선을 위한 설명회’에서 사건 발생 직후 바로 자살로 규정하는 예단, 미흡한 초동수사와 사건현장 훼손, 유족에 대한 군 당국의 박대와 군사기밀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비협조 등을 수사절차상의 문제로 들었다.

천주교 인권위 고상만 간사는 “접수된 사례 중에는 사망자가 입었던 군복을 빨아버린 경우도 있었고,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유족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야 보여줄 수 있다’고 한 사례도 있었다”며 군 수사체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경기도의 한 부대 관사에서 일어난 육군 대위 사망사건도 좋은 사례다. 부대에서 유족에게 시신 공개를 꺼리고, 미리 자살로 규정해 수사를 진행하는 바람에 유족들의 반발을 샀다. 또 사건 현장에서 지문채취, 현장보존 등을 소홀히 해 초동수사가 크게 미흡하다는 불만을 샀다.

국방부의 한 법무 관계자는 “현재 군의 수사인력 선발 및 교육, 수사기법 개발 등 수사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는 군의 수사가 ‘군대 안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이다. 이는 유족들이 수사결과를 믿지 못하게 해, ‘의문사 양산’의 결정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 유족은 “군에서는 헌병대든 군 검찰이든 모두가 한통속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

다. 군으로서도 나름대로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 해도 유족들로부터 의심을 받아 맥이 빠지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유족들은 물론 군 수사관들조차 사망사고만큼은 민군 합동의 독립적인 제3의 기구에서 수사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훈 중위 사건을 맡은 이덕우 변호사는 “사망사건은 군내 사고이기에 앞서 인간이 고귀한 생명을 잃은 중대사건인 만큼 독립기구에 의한 진상규명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의 김영률 법무과장도 “현실적으로 면밀한 법률검토가 있어야겠지만, 그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1999. 4. 8. 한겨레신문)

## 6. 군 자살자를 위한 ‘땅 한평’

군의문사 관련 기획기사(9일치 한겨레창)가 나간 뒤 국방부는 실무자 차원에서 군 자살자의 예우문제를 검토했다는 후문이다.

아들을 군대에 보냈는데, 어느 날 한줌의 뼈로 돌아왔을 때의 기분은 유족들의 말마따나 ‘당해보지 않고는’ 모를 것이다. 그 죽음이 자살일 때는 보상을 받기는커녕, 나약한 아들을 뒤통까지 들어야 한다.

의문사를 당하면 유족들의 생활마저 비참해진다. 지난해 숨진 한근수 이병의 어머니는 우울증을 앓다 정신병원에 다니고 있다. 고 이승원 일병의 부모는 진실규명을 위해 쫓아다니다 가정이 파탄날 지경이다. 군희생자유가족협회에는 ‘집에 혼자 있지 못해’ 모임에 나오는 사람이 상당수다.

군의문사는 대개 자살로 처리된 사건이다. 자살 이유는 대부분 ‘군생활 염증’이다. 이승원 일병의 경우 사고 직전 고참병으로부터 심한 가혹행위를 당했고, 평소에도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한다. 사망원인이 잘 안 밝혀지는 것이 많지만 명백한 자살인 경우에도 원인의 상당부분은 군대 안에 있는 경우가 많다.

국방부 실무자들도 이런 점을 감안해 자살자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부정적인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등 대부분 국가에서 그런 사례가 없다는 것도 이유의 하나다. 하지만 선진국과 우리 군대문화의 수준



을 비교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는 군 자살자도 국립묘지에 안장한다.

사병들이 국립묘지에 묻히면 한 평의 묘역을 차지한다. 자살자에 대해 보상은 그만두고라도 그 정도의 예우조차 못해주겠다는 것은 합당한 처사가 아니다. 국립묘지 안장이 자식을 가슴에 묻은 유족들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면 한평의 땅이 아까우랴.(1999. 4. 12. 한겨레신문)

## 7. '군 의문사 독립기관서 재조사해야'

천주교인권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32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3의 독립된 기관을 통해 의혹이 제기되는 군내 사망사고를 철저하게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군 당국은 군대 안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보존조치 하지 않고 미리 자살로 결론 내린 뒤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며 “국방장관은 유가족들의 면담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처음에 유가족의 반대로 부검을 못했고 그 뒤 유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고 20일이 지나면서 사체가 부패해 법질차에 따라 부검을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군에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 13명은 지난달 27일부터 국방부 정문 앞에 천막을 치고 9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1999. 6. 4. 한겨레신문)

## 8. '군의문사 진상규명' 농성

“우리의 자식들이 더 이상 전쟁의 소품이 아닌, 귀한 자식들로 당연하게 대우 받는 그 날을 위해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현충일을 이틀 앞둔 4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국방부 청사 앞. 전국군포력희생자유가족협회(이하 전군협) 이해숙(44)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군 의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절규하고 있었다. 이 회장을 비롯한 13명의 회원들은 지난달 27일부터 9일째 물과 소금만으로 연명하며 천막 안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군대에서 의문사한 자식을 둔 40~60대 어머니들이다.

“군 당국이 의문사 의혹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

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처절한 요구는 굳게 닫힌 철문 앞에서 ‘메아리 없는 외침’일 뿐이다.

이 회장의 단식농성을 촉발한 것은 지난 4월24일 공군 부대에서 발생한 장승완 상병 사망사건이다. 당시 유족과 전군협에서 사망원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군은 유족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사체를 강제부검해 분노를 사고 있다.

“5월 12일 국방부가 전군협과 간담회를 제의해 회의를 하던 도중 장 상병의 시신을 병원에서 빼내다 강제부검한 뒤 시신을 자살로 규정지었어요.”

이 회장은 이런 문제가 군 사망사건을 군 스스로 수사하는 구조적인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독립적인 제3의 수사기구를 만드는 등의 근본적인 방안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우리의 죄라면 자식을 군대에 보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군은 어느 날 자식을 싸늘한 시신으로 돌려보내 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1999. 6. 4. 한겨레신문)

## 9. 군의문사 1백32건 재조사, 해결건수 0'

군 당국의 군내 의문사 재조사가 유가족단체 등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지 5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길돌고 있다.

국방부는 5일 “지난 2월 재조사 착수 이후 각군 본부를 통해 모두 1백32건의 군내 의문사 접수를 받았으나 아직까지 결론을 내린 사건은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현재까지 수사기록을 정리하고 사건 관련자를 추적해 탐문조사를 벌이고 있을 뿐 사건별로 본격적인 재조사는 착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사망사건 재조사특별조사단의 양인목 자문위원(예비역 중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어 “조사단 인력을 74명으로 늘리고 유가족이 추천하는 법의학자, 경찰출신 수사전문가, 변호사 등의 조사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1999. 7. 5. 한겨레신문)



## 10. 군의문사 6명에 순직, 일반사망 인정

국방부 의문사특별조사단은 8일 오후 3월까지 유가족들에 의해 민원이 제기된 군내 의문사 1백66건 중 2차로 34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 당초 변사나 병사로 처리됐던 6명을 순직 및 일반사망으로 조정, 판정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34건 중 28건은 당초 조사내용과 같아 유족동의 아래 사건을 종결했으며, 변사나 병사로 처리됐던 5명은 순직, 귀가중 교통사고로 숨진 해군 김지영 병장은 일반사망으로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단은 나머지 1백2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올 11월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순직으로 인정받을 경우 국립묘지 안장과 함께 사망보상금 지급 등 재해 및 보훈혜택이 주어지고 일반사망은 재해보상 혜택을 보게 된다. 국방부는 의문사의 경우 일반사망자도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할 방침이다.(2000. 6. 8. 한국일보)

## 11. 군 의문사 진상규명 요구

군경전사순직자가족협의회(회장 이애련)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회원 2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군폭력 은폐조작 및 순직자위상재정립 촉구대회’를 가졌다.

지난 8월 군 유가족 1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발족한 가족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군복무를 하다 희생당한 순직자들을 위해 군과 정부는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빨리 사건을 덮기 위해 은폐, 조작의 태도로만 일관해왔다”며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족협의회는 “또한 배상청구자체를 차단하는 헌법 제29조 2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의해 유가족들은 적절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통령은 유공자 기본연금 인상에 대한 공약을 즉각 이행하는 한편 배상청구를 막고 있는 악법을 즉각 폐지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토목공학과 재학중 3사단에 입대했다 지난 96년 숨진 고 김영세(74년 생) 이병의 어머니인 이애련 가족협의회장은 “군당국은 아들의 사인을 ‘익사’라

고 밝혔으나 당시 폭우로 수위가 엄청 불어있던 부대 근처 강물에 그것도 수영을 잘하는 아들이 무모하게 들어가 숨졌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몇 가지 타살 의혹에도 불구하고, 군은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다”고 밝혔다.

가족협의회는 이어 관련법 개정과 의문사 의혹이 있는 순직자들에 대한 사인 재조사, 유족에 대한 예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종로3가 전철역까지 이르는 1.2킬로미터 구간을 행진한데 이어 이날 오후 국가보훈처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2000.11. 3. 연합뉴스)

## 12. 유족 의문 못 푼 ‘군 의문사’ 조사

“군대간 아들이 자살했다는 말을 믿을 수 없어요. 애초 발표와 다르지 않은 국방부 재조사 결과를 들었지만 수궁하기 어렵고요.” 1999년 9월 육군 논산훈련소에서 총기로 목숨을 끊었다고 발표된 이지명 하사의 어머니 김봉임(48·강원철원군)씨는 1년6개월이 지난 지금도 아들의 장례를 미루고 있다. 평소처럼 집에 안부전화를 한 아들이 불과 몇 시간 뒤 자살했다는 설명이 여전히 김씨 부부를 미궁 속에 가둬두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처럼 군대간 아들을 주검으로 맞은 유족들의 의문을 풀기 위해 국방부는 99년 4월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별조사단’(단장 김종화 소장)을 꾸려 재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의문을 풀지 못한 채 답답해하는 유족들은 늘어만 가고 있다.

특별조사단은 접수한 1백66건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95건의 재조사를 끝냈지만, 유족들이 제기한 ‘타살 의혹’이나 ‘자살 원인’을 새로 밝혀낸 경우는 없다.

재조사를 끝낸 사건 중 14건은 일반사망·변사·병사에서 순직으로, 2건은 병사에서 일반사로 바뀐 게 고작이다. 순직처리의 경우 회식 도중 숨진 경우를 포함시키는 등 사망과 업무의 관련성을 적극 해석한 데 따른 것이 대부분이며, 병사에서 일반사로 바뀐 경우는 사망 경위가 좀더 명확해졌을 뿐이다.

나머지 79건은 사실이 새로 밝혀지지 않은 것은 물론 결론도 바뀌지 않은 채 종결됐다. 게다가 군당국의 재조사는 △조사단이 군 관계자로만 구성돼 있고 △전역한 참고인의 진술을 강제할 수 없으며 △조사단이 오는 9월까지만 활동하



는 등 유족들의 의문을 풀기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국군포력희생자유가족협회(전군협) 이혜숙 대표는 “전군협도 유족들과 함께 조사에 참여했지만, 조사방식에 문제가 많아 곧바로 참여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도 이런 특별조사단의 한계를 절감하고 유족과 함께 협의 기구를 꾸려 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천주교 인권위 법률구조분과위원장인 이석범 변호사는 “한 해 3백여명의 군인이 숨지고 자살이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지금으로선 유족들을 납득시킬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군과 민간이 함께 군대내 의문사를 전담하는 독립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화 특별조사단장은 “95건 모두 유족이 조사에 참여했고, 군 안팎 자문위원 등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려 애썼다”며 “유족들의 입장에서 조사했으나 결론이 뒤바뀌지 않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2001. 3. 23. 한겨레신문)

### 13. 군의문사 진상규명 국가가 책임져야

“20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자란 아들이 군대 간 지 몇 달만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오면 어떤 부모가 제 정신일 수 있겠습니까?”

지난달 28일부터 서울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포력 근절을 위한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는 군의문사진상규명과 군포력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군가협) 김정숙(58) 회장은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것 같은 얼굴로 말문을 열었다.

30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았던 김씨가 집 밖으로 나온 것은 1998년 학군단으로 입대했던 아들 박도진(당시 25살)씨가 1년 만에 변사체로 발견되면서부터다. 당시 군대는 ‘사고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지만, 김씨는 평소 “군대가 썩었다”, “군대를 개혁해야 한다”며 성토했던 아들이 가혹행위로 사망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군대에서 갑자기 죽을 수 있지요. 심장마비든 오발 사고든 자살이든. 문제는

군대가 모든 원인을 사망자 본인에게 돌리고 급하게 조사를 끝내버린다는 겁니다.”

지난해 9월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96년 자살한 현역 장병의 수는 1백30명으로 전체 사고사의 28%인 데 비해, 97년 92명(33%), 98년 1백2명(41%), 99년 1백1명(43%), 2000년 82명(45%)으로 군내 사고사 중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씨는 “군대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가족문제, 성격문제, 애인문제 등을 꼬투리 잡아 일단 자살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죽음도 억울한데, 조사 과정도 유족의 분통을 터뜨리게 만든다. 군사보안지역이라는 이유로 유족의 현장 출입 및 사진 촬영, 관련자 면담 등을 극도로 제한한다. 최근에는 군가협측이 한 사병의 의문사 수사발표 현장을 비디오로 녹화했다가 15시간 동안 감금당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가 이끄는 군가협은 98년 김 훈 중위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군의문사진상규명과 군포력근절을 위한 가족모임’을 모태로 발족했다. 최근까지 10건 이상의 군대 의문사를 조사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33건의 의문사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군가협이 가장 주력하는 부분은 군대 사망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사건 수사를 맡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20일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징병제와 군의문사 국가책임’을 논의하는 토론회도 마련했다. 2000년부터 매달 마지막주 화요일에는 국방부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군포력 근절 캠페인에도 힘쓰고 있다. 김씨는 “장기적으로는 징병제를 직업군인제로 전환하는 법개정 청원도 생각중”이라고 조심스레 덧붙였다.

“흔히 군대와의 싸움은 달걀로 바위치기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가족들이 중간에 지쳐서 나가기도 했고요. 하지만, 내 아들은 갔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또 다른 젊은이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할 거 아닙니까?” 김씨는 흐르는 눈물을 닦고 다시 형형하게 눈빛을 빛냈다.(2002. 6. 17. 한겨레신문)



#### 14. “모든 군의문사 민-관 합동조사를”

백발이 희끗한 아내는 젊은 남편의 장교 임관 사진을 부여안은 채 국방부를 향해 절규하고 있었다. 늦여름 비가 흠뻑리던 27일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는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군가협) 주최로 열린 ‘군의문사 전면조사 촉구’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 나선 변진구(63·강원도 춘천시)씨의 눈물에는 33년 한이 서려 있다. 그는 지난 1969년 어느 날, 육군 준위였던 남편이 ‘가슴에 총을 쏘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그는 시신조차 인수받지 못했고, 남편은 군부대에 그대로 매장됐다. 지난해에야 남편의 묘를 자신이 사는 춘천으로 이장할 수 있었다. 이날 변씨의 옆에는 검은 상복을 입은 20여명의 어머니들이 저마다 군의문사 한 아들의 사진을 부여잡고 “내 아들의 죽음을 밝혀달라”고 통곡하고 있었다.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84년 자살로 종결된 허원근 일병 사건을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고 발표하자, 군의문사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방부는 군의문사와 관련해 지난 99년 4월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별조사단’(특조단)을 구성해 2001년 10월까지 사망사고 민원에 대한 재조사를 마쳤다. 그러나 접수된 1백66건의 민원 중 회송, 이첩된 5건을 제외한 1백61건에 대한 재조사 결과, 자살에서 타살 등으로 사망원인이 바뀐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다. 다만 사망 정황에 대한 해석이 바뀌어 20건이 자살에서 순직으로, 4건이 자살에서 변사로 처리됐다.

지난해 특조단 조사를 받은 변씨는 “남편의 매·화장 보고서 조작 증언이 확보되는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특조단은 서둘러 자살로 결론지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허원근 일병의 아버지 허영춘씨는 “국방부 특조단은 내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줄곧 자살로 얘기해 왔다”며 “국방부가 군의문사와 관련해 민관 합동 재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99년 군에서 숨진 아들 이지명 하사의 어머니 김봉임(49·강원도 철원군)씨도 “9월 13일이면 아들을 육군병원 냉장고 안에 가둬둔 지 꼭 3년째”라며 “민관이 함께 한번만 제대로 재조사를 해보면 아들을 떠나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울먹였다. ‘군가협’과 함께 진상규명 활동을 벌이고 있는 남상덕 천주교인권위 사무

국장은 “올해 10여건이 추가되는 등 천주교인권위에 접수된 의문사만 40건이 넘는다”며 “특조단 재조사 때 허 일병 사건 외의 다른 군의문사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특조단 재조사 때 이미 유족들을 참여시켰다”며 “허 일병 특조단을 확대할 계획이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2002. 8. 27. 한겨레신문)

#### 15. “인권위마저 손놓으면...”

16일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종결된 가운데 ‘민주화와 관련된 의문의 죽음’으로 그 대상이 국한된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조사 대상도 되지 않았던 군의문사 유가족들이 절규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냈으나 아직까지 결과를 통보 받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의견’만을 들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유가족 임명숙(50·대구시 수성구 두산동)씨가 공군에 복무하던 아들 장승완(당시 22살) 상병의 사망 소식을 들은 것은 1999년 4월이다. 군부대 측은 장 상병이 사건 전날 장병학습평가에서 고참병의 대리시험을 치다 적발돼 반성문을 쓰다가 화장실 문틀에 목을 맸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임씨는 △아들이 시험 당일 밤에도 집에 전화를 걸어 명랑하게 통화한 점 △목부위 구멍 등 상처들을 들어 의문을 제기했지만 사건은 일사천리로 자살로 종결되었다.

임씨는 자식의 주검을 영안실에 냉동보관하고 장례도 치르지 않은 채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려고 3년 동안 노력해 왔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내는 한편 국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인권위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구두로 양해를 구해왔다.

또 다른 군의문사 유가족 김기순(54·충남 논산시)씨도 해군 중위로 근무하다 98년 8월 탈영한 뒤 경북 김천의 한 야산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된 아들 김태윤(당시 24살)씨의 주검을 김천의료원에 냉동보관한 채 진상규명에 나서고 있다. 김씨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지만 아직 이렇다할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



다. 김씨도 역시 국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국가인권위는 엄씨와 김씨 사안에 대해 “예비조사를 하고 있으며, 최종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군의문사 유가족들의 애타는 사연들은 이어지고 있지만 자식을 냉동실에 보관한 이들의 한에 비해 국가기관의 행보는 너무나 느리다.(2002. 9. 17. 한겨레신문)

## 16. 불신 받는 군의문사 수사 해결책 없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18년 전 자살로 처리된 허 일병 사건을 타살로 결정하여 발표하였다. 군 복무 중 숨진 군인들의 유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끊임없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러니 군 전체 사망사고의 40~45%를 차지하는 자살 사고에 대해 이의제기 등의 항의가 더욱 빗발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흰한 일이다. 멀쩡하던 아들을 군에서 잃은 부모들로서는 억울하게 죽은 것도 서러운데 갖은 불명예를 덮어씌워 자식이 자살을 했다니 슬픈 심정이 더하고 원망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군대는 폐쇄된 곳이다. 유가족들은 여기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알고 싶은 게 많으나 접근이 어렵다. 수사할 때 군의 보안을 강조해 공개를 꺼리니 부정확한 사실들이 전해지기 쉬울 것이다. 앞뒤 상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전달되는 사건 내용은 오해될 부분이 많다. 사망자의 동료 장병들이 우연히 유가족과 만나 위로한다고 하는 말들이 수사발표와 정반대일 수도 있다.

실제 군 수사가 일반 국민들에게 불신과 오해를 받을 소지는 많다. 수사를 담당하는 헌병과 수사지휘와 감독권한을 가진 검찰이 같은 사단장의 지휘권 안에 있다. 지휘관의 의지가 수사나 기소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는 점은 쉽게 짐작이 간다. 또한 보안을 이유로 자료를 전혀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지휘관들이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승진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봐 조작을 유도할 가능성도 많다. 변사자 사건의 경우 사체에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찾아내는 법의학자들이 군 전체에 2~3명이 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변사

자 등의 수사를 전담하는 전문부서나 수사관이 따로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군에서도 사고가 일어나면 나름대로 성의 있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수사를 하고 있다. 사건 조작도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가능했을지 모르나 지금은 아니다. 또 대형사건·사고가 아닌 단순한 사망사고는 상급지휘관들에게 그리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변사자 처리는 최초 현장에서부터 수사종결까지 헌병은 군 검찰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 사체처리 역시 군 검찰관의 수사 지휘에 따른다. 이들 군 검찰관은 사법시험이나 군법무관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인들이다. 그들이 타살을 자살로 조작하는데 협조하리라는 생각은 상식 밖의 일이다. 변사자 사건은 조사 기한이 규제되어 있지 않다. 독일·일본·프랑스 등에서는 군내 사고라도 일반 검찰·경찰이 수사를 맡는데, 이것은 그 나라들의 군 체계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군의 존재는 전쟁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군 내부의 사건·사고까지 일반 검·경찰이 수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제의 해결책은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 징병되어 정신적·육체적으로 억제되고, 단체생활에 적응하기 힘들며 상급자들로부터 가혹행위·구타·따돌림 등을 당해 자살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경우 자살이 군 생활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이제와 자살이나 타살이나를 규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군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이유로 자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순직처리 해주고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옳다. 그래봐야 연간 50명 미만이다. 또한 변사자 처리를 위해 전문수사관을 양성하고 법의학자들을 더 증원해야 한다. 그리고 유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군부대 안이라도 현장을 공개하고 책임 있는 사람의 설명이 꼭 있어야 한다. 그것이 자식 잃고 가슴에 피멍든 유가족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이다.(2002. 9. 25. 한겨레신문)

## 17. “80년대 군의문사 수사 문제점 많아”

지난 80년대 군내 사망사고 당시 군 수사기관이 개인적 사유로 인한 자살로 예단하거나 일부 부대 지휘관들은 책임 모면을 위해 현장을 조작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았던 것으로 지적됐다.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는 9일 기자회견을 갖고 80년대 군의문사 사건 25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군 수사기관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진상규명위는 군의문사 수사와 관련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사망사유에 대해 군수사기관이 으레 개인적 사유나 신병비관에 의한 자살로 몰고 가는 바람에 폭행 또는 가혹행위 등 타살의 가능성이 배제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로 지난 87년 육군 모 사단에서 숨진 이모씨의 경우, 평소 근무편성 문제로 고참병들에게 구타나 일차려를 수 차례 당했고 사망 전날에도 고참병에게 심하게 맞았던 것으로 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지만 헌병대는 이 부분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가정문제 비관으로 자살했다고 결론지었다.

부대 지휘관이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사망현장을 은폐·조작하거나 헌병대 스스로 사건 경위의 은폐·조작을 묵인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3년 숨진 한모씨의 경우, 다른 사병의 총에 맞았지만 소속 대대장이 문책을 우려해 한씨가 자신의 총으로 자살한 것처럼 현장을 조작했으며 헌병대 역시 수사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았으나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위원회는 말했다.

수사기록 보존연한이 7년에 불과, 기록이 폐기된 경우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가 어려웠다는 점과 소위 '실세'였던 당시 보안사령부나 지휘관 직속 지휘부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군 수사기관의 수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들은 80년대 군 의문사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것들이지만 최근 발생하는 군 의문사 사건에서도 이와 거의 흡사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군 의문사 처리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내주 초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와 대국민 보고서에 군 수사기관의 독립성 확보와 군내 사망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예우 등의 권고안을 담을 방침이다.(2002. 10. 9. 연합뉴스)

## 18. 인권위, 군의문사 본격조사

군에서 발생한 의문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인권위는 25일 지난 2001년 11월 경기도 포천 소재 모 부대에서 발생한 강모(당시 21세) 하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 사건 처리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26일 실지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당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강 하사는 군 수사기관에 의해 진급 누락과 신병 비관 등을 이유로 K-2 소총을 이용해 자살한 것으로 발표됐으나 유가족은 총구를 거머쥔 사망자의 두 손에 검게 그을린 자국이 있고 혈흔이 사망자의 앞뒤로 흩어져 있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상규명을 요청했다.

인권위는 이번 실지조사에서 유가족, 법의학자, 물리학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총기격발 자세 재현, 탄두 수색, 혈흔의 흩어진 모양에 대한 물리학적 검토 등을 통해 당시 수사결과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인권위에 진정 접수된 군 의문사 사건은 모두 33건으로 인권위는 올초 군 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관 4명으로 구성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한 바 있다.(2003. 2. 25. 연합뉴스)

## 19. 자살로 예단하고 특하면 은폐·조작

군 수사기관이 의문사 등 군부대에서의 각종 사망사건 중 상당수에 대해 자살로 예단한 채 수사하거나 사고 원인과 현장을 은폐·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수사를 맡은 군 검찰과 헌병대가 사고 원인이 밝혀질 경우 지휘·감독 책임 등을 져야 할 사단장의 지시를 받게돼 있는 수사 시스템 때문에 앞으로도 사건 발생시 진상이 제대로 규명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9일 “의문사위에 접수된 25건의 군의문사 사건을 조사한 결과 당시 군의 수사에서 적잖은 문제를 확인했다”고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 1) 수사조작

1991년 2월 육군 1사단에서 복무중 의문사한 남현진씨(당시 21세)는 헌병대에 의해 완전군장 훈련과 전방 철책근무에 따른 불안감 및 복무염증으로 목매 자살했다고 결론지어졌다. 하지만 남씨의 군 동료인 허모씨는 의문사위 조사에서 “당시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남씨가 고참병들에게 군가 암송 등을 제대로 못해 여러 차례 구타를 당했다고 말했지만 수사관이 이를 고의로 무시했다”고 진술했다.

5군단에서 복무중 불우한 가정환경을 비관해 84년 총기자살한 것으로 종결된 임용준씨(당시 22세)도 의문사위 조사에서 군 수사결과와 달리 고참병들로부터 상습적으로 심한 구타를 당했으며 임씨의 군인수첩에도 고참의 구타 등 내무부 조리에 대한 메모가 남겨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87년 의문사한 이승삼씨(당시 19세)는 아침구보 낙오 등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총기자살한 것으로 결론지어졌지만 당시 사건을 1차 수사한 헌병 수사관은 의문사위 조사에서 “이씨가 고참병들에게 구타당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당시 헌병대장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숨겼다”고 진술했다.

## 2) 여전한 수사 시스템

군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상당수가 ‘변사’가 아닌 ‘자살’로 예단해 상부에 보고하고 군 수사기관도 대부분 신병 비관을 주원인으로 내세웠다는 게 의문사위의 설명이다. 의문사위는 “부대 지휘관 상당수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헌병 수사관이 도착하기 전 사망현장을 조작하거나 경위를 은폐했으며 헌병대도 이를 묵인하기도 했다”면서 “이 때문에 비록 자살했다 하더라도 부대 내의 폭행이나 가혹행위 등 근본적인 이유는 대부분 숨겨졌다”고 밝혔다.

또 유족들이 사망 원인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 국방부 등 상급기관에서 재수사하지만 대부분 기존의 수사를 확인하는 데 지나지 않았다고 의문사위는 설명했다.

실제로 98년 김 훈 중위 사망사건 뒤 발족한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1백66건의

자살사건을 재수사했지만 사망 원인이 뒤집힌 것은 단 한건도 없었다는 것이 의문사위의 지적이다.

특히 현재도 80년대처럼 군의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참모총장에게 발생 뒤 7일 내에 수사결과를 보고하도록 돼있는 등 시한에 쫓기는 데다 수사 주체인 군 헌병대와 검찰이 해당 부대 운영의 최고책임자인 사단장의 지휘를 받는 시스템이 수사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분석이다. 의문사위 관계자는 ‘군 헌병대와 검찰이 군 특성상 자신들을 지휘하는 사단장에게 불리한 수사결과를 내놓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의문사위 김준곤 상임위원도 “최근 일어나는 군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도 80년대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명확한 사건 조사를 위해 국방부 내에 군 수사기관을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관계당국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02. 10. 10. 경향신문)



## 제2장 군의문사법 제정 추진경위

### 1. 군가협 “군의문사 진상규명특별법 제정해야”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이하 군가협)는 7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일반인과 대학생을 상대로 ‘군의문사 설명회’를 갖고 군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군가협측은 설명회에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6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군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나 사망자 중 자살처리 비율은 오히려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가협측은 또 군의문사 조사 과정의 문제점으로 현장 훼손과 함께 △요식 행위에 그치고 있는 검시 및 부검제도 △보안규정의 남용 등을 제기했다.

군가협측은 군의문사 해결과 예방을 위한 대책과 관련, 군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대통령소속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와 같은 기관을 창설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의문사 전담조사국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단체는 이와 함께 군사법원 등 일련의 군 사법제도 개혁과 군 수사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군가협 서석원 간사는 “군 의문사의 심각성이 일반인에게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아 진상규명에 힘이 실리지 못하고 있다”며 “자신 또는 주위 사람의 일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심각성에 대한 이해와 문제의식을 통해 군 의문사 문제의 해결에 다가서야 한다”고 말했다.(2003. 5. 7. 연합뉴스)

### 2. ‘군의문사 특별법’ 제정 본격 추진

지난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허원근 일병 자살 조작’ 발표로 군의문사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군에서 발생한 사인이 불분명한 사망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15일 국회와 관련단체 등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장영달 의원은 지난달 ‘군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가안을 만들어 국회 법제실에 입안

을 의뢰했다.

장 의원실의 조형국 비서관은 “‘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을 모태로 하고 천주교인권위원회 산하 군의문사 대책위와 군의문사 유가족 등의 요구 사항 등을 법안 가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실은 “군 의문사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안 의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달 안으로 실무적인 입안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 측은 입안이 끝나는 대로 장 의원이 대표로 입법 발의할 지, 아니면 국방위 소속 다른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할 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 비서관은 “허원근 일병 사건에서 보듯 군 의문사 사건에 대한 유가족의 불신이 위험한 수준이어서 국방위 소속의원들도 이를 우려하고 있다”며 “유족들이 기존과는 다른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다룰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국방위 의원 사이에 형성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군 의문사 유가족으로 구성된 ‘군 의문사 진상규명과 군 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군가협)도 이르면 다음 주에 의원 소개로 ‘군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가칭)의 입법을 국회에 청원할 계획이다.

이 특별법에는 현재 2기 활동을 준비중인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유사하게 군의문사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설립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예정이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매년 군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96년 3백59명에서 2001년 1백61명으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나 이 중 자살 처리 비율은 28.7%에서 41.0%로 오히려 늘고 있어 당국의 군 의문사 처리에 대한 유족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군가협 서석원 간사는 “98년부터 활동해 온 군의문사 유가족들의 노력이 이제야 어느 정도 인정받는 분위기인 만큼 관련 특별법의 제정을 위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내달에는 청와대,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유관 부처와 함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도 처음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03. 5. 15. 연합뉴스)



### 3. 군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국회청원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 폭력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이하 군가협)는 20일 군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군가협은 “군의문사 문제는 수사대상인 군이 스스로 주체가 돼 수사한다는 모순을 안고 있다”며 “군은 부실수사를 해놓고도 사망자 개인의 과실, 복무기피, 가정환경 등 사망자와 유가족에게 책임을 돌려왔다”고 주장했다.

군가협은 “납득할 수 없는 억울한 죽음에 대한 유가족의 진상규명 요구는 당연한 것”이라며 “군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2003. 6. 20. 연합뉴스)

### 4. 군의문사 특별법 국회 제출

강삼재 의원(한나라당) 등 여야의원 2백7명은 18일 군대 안 사망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해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하는 ‘군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냈다.

이 법안은 현재 2기 조사가 진행중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같은 형태의 위원회를 구성해 군대 안 사망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은 ‘군의문사가 없다’는 국방부의 주장과 달리 ‘군의문사’를 ‘군복무중 사망한 자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안은 그동안 군 의문사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해왔던 천주교인권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각 시민사회단체와 토론회 등을 통해 특별법 제정운동을 벌여온 데 따른 것이다.(2003. 9. 19. 한겨레신문)

### 5. “군의문사 진상규명법, 군 사법제도 개혁 필요”

군 의문사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군 수사기관의 실질적인 수사권을 보장하는 군 사법제도 개혁이 필요하고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6일 인권위 배움터에서 ‘군의문사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류관석 변호사는 “군 의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 검찰을 지휘관으로부터 제도적으로 독립시켜 군 수사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수사지휘권을 보장하는 군 사법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 변호사는 또 “현재 군사법원법으로 통합돼 있는 군사법원과 군검찰에 대해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 제도적으로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며 “조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현재 해당 부대장이 가지고 있는 사망사고 처리에 관한 조사 및 처분권한을 제도적으로 이양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소속 황학수 변호사는 “이미 발생한 의문사의 경우 그 결과에 대해 유족들의 불신이 극도에 달한 만큼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의 기관이 진상을 규명토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다른 전문가들은 군 수사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중인 군의문사 사건의 어려움을 제시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오창래 조사상담실장은 “군의문사가 발생하는 원인은 군 수사의 근본적 한계 때문”이라며 현장 및 증거훼손 등 불성실한 초동수사, 부대원의 진술에 의존하는 군 수사관의 조사능력 부족, 촉박한 조사기한 등을 지적했다. 오 실장은 “군 수사의 근본적 한계로 인해 최초에 내려진 잠정적 결론이 군의 서면보고상 결론 또는 최종결론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군의문사 사건을 다루는 박종덕 조사3과장은 “현재 모두 16건의 군의문사 사건을 조사중이지만 오랜 시간의 경과로 인해 중요 참고인이 사망하거나 참고인의 기억이 분명치 않아 예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사기록이나 현장사진조차 전혀 구할 수 없는 사건도 상당수 있다”며 “만약 광복이후 모든 군의문사 사건을 다룰 것으로 예상되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03. 11. 26. 연합뉴스)



## 제3장 녹화사업

### 1. 80년대 운동권 대상 '녹화사업' 실체 밝혀

#### 80년대 운동권학생 1천1백여명 강제징집

1980년대 초 시위 및 집회 참가 학생 등을 강제징집하여 특별정훈교육 및 프락치 공작 활동을 벌인 이른바 '녹화사업' 대상자는 무려 1천1백여 명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 녹화사업은 당시 보안사, 치안본부, 검찰, 안기부, 문교부, 대학 등이 총동원돼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실도 확인됐다.

그동안 녹화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88년 국방부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강제징집 등 일부 사실을 밝힌 바 있으나, 대상자 규모와 각 기관의 구체적인 역할 등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밝혀진 녹화사업 실체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규명위·위원장 양승규) 고위관계자는 21일 "규명위에 접수된 이윤성씨 등 5건의 군의문사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81년 11월부터 3년 동안 1천1백여명의 학생이 강제징집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 결과, 관련부처와 공안기관 등이 긴밀한 조직적 협조 아래 '동향파악→연행→등급분류→강제입영→특별정훈교육'으로 이어지는 녹화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당시 공안기관 관련자로부터 '국무회의 또는 관계기관 대책회의 같은 권력 최고위층에서 녹화사업 전반에 대한 정책을 입안·조율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 강제징집자 사망사건 조작·은폐

규명위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강제징집돼 의문사한 이윤성씨 사건 등 녹화사업 관련 사건 및 기록이 군 당국에 의해 은폐 및 조작된 사실도 밝혀냈다.

이씨는 성균관대에 재학중인 82년 11월 학생의 날 시위에 참가했다 강제징집돼 83년 5월 전역을 8일 앞두고 의문사했다. 당시 군당국은 "월북을 시도했던 이씨가 보안사 조사를 받던 도중 자책감을 못 이겨 목을 매 숨졌으며,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규명위 조사에서 당시 이씨를 심문했던 보안사 요원들은 "이씨가 월북을 기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사망 이후 사건발표 과정에서 월북기도 혐의가 덧씌워졌다"고 진술했다고 규명위는 밝혔다.

규명위 관계자는 "당시 군의관이 작성한 검안소견서에 '목 주변에 손으로 쥘린 흔적이 있다'고 판정한 점이 가혹행위를 방증하며, 이씨 이마에 남은 상처도 사망 하루이틀 전에 생겼다는 외부 전문기관의 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 병적기록부 조작 의혹

규명위 관계자는 "강제징집된 1백여명의 병적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특수지원'이라는 날인과 각 부대 진출 확인날인이 모두 사라졌고, 각 사항의 필체가 한 사람의 것으로 밝혀졌다"며 "녹화사업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이를 숨기기 위해 군 당국이 강제징집 대상자들의 병적기록부를 일제히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01. 10. 21. 한겨레)

### 2. "녹화사업, 대통령지시 시사문건 확인"

지난 80년대 초 운동권 대학생들을 강제징집해 프락치로 활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소위 '녹화사업'은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82년 8월 육군참모총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문서에 따르면 80년대 초 '녹화사업'이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드러내는 정황이 잘 나타나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문서를 처음 공개했다.

진상규명위는 "국방부 실지조사를 통해 입수한 이 문서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이 82년 7월 '상부지시 (특)사항'이라는 지시를 육참총장에게 내렸고 여기에는



문제사병 전방근무 유도 및 전방부대 문제사병 후방근무 지양 등의 지시사항이 있었다”며 “육참총장은 이에 대한 조치로 ‘신원조회 관계자는 지구보안부대와 협조, 소속부대에서 최대한 활용’이라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보고문건이 올라간 시기는 후암동 대공분실에서 보안사 군무원들이 근무했고 실제 관련조사가 이뤄졌다는 진술이 나온 때와 일치하는 것으로 녹화사업 도입 초기의 준비과정을 밝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이와 함께 강제징집·녹화사업 관련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이들의 죽음엔 모두 당시 보안사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으나 군 수사기관은 의도적으로 ‘녹화사업’ 관련성을 부인하고 모두 개인적인 비관자살로 몰아갔다고 말했다.

지난 83년 부대 훈련중 숨진 한영현씨의 경우 신병훈련 기간에도 1주일간 보안부대에서 심사를 받고 두달 뒤에도 서울 보안사에 불려와 프락치 활동을 강요 받으면서 자신의 진술로 운동권 조직이 와해되고 동료들이 자신을 기피하는 것을 보고 갈등 끝에 자살했지만, 군 수사기관은 불우한 가정형편 등으로 삶을 비관하다 자살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진상규명위는 “기무사의 협조거부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 등 녹화사업관련자들의 조사불응 및 책임회피로 진실규명이 어렵다”며 “위원회 동행명령에 불응한 두 전직대통령에 대해 각각 1천만원과 7백만원의 과태료를, 실지조사를 거부한기무사와 국정원에 대해서도 기관장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기로 했다”고 밝혔다.(2002.10. 11. 연합뉴스)

### 3. 군부정권의 추악한 과거

박정희·전두환 군부정권 아래 저질러진 공작정치의 실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조사에 따르면 80년대 초 대학생들을 강제징집하여 특별정훈교육과 프락치 공작활동을 벌였던 ‘녹화사업’은 권력최고위층에서 입안했으며, 녹화사업 대상자만도 무려 1천1백명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신독재 정권 때의 대표적인 의문사 가운데 하나인 고 최종길 서울대 법대교수의

경우 당시 중앙정보부가 최 교수를 상대로 공작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군부정권 아래 빛어진 온갖 인권유린과 공작정치를 생각하면 이 두 사건은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극히 작은 한 부분에서 우리는 추악한 과거를 거듭 확인하게 된다.

학생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시위에 참가한 대학생들을 강제징집한 ‘녹화사업’은 관련부처와 공안기관이 총동원된 합작품이었으며, 강제징집된 학생 가운데 의문의 죽음을 당한 이윤성씨 등의 경우에는 관련기록이 은폐·조작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최종길 교수는 당시 중앙정보부의 공작함정에 빠진 것이 확인됐다. 최 교수는 중정 요원의 권유와 자신의 호기심 때문에 동베를린행 지하철을 탔으며, 그것이 간첩협의를 결정적 증거가 됐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경우만 보더라도 박정희·전두환 군부정권이 얼마나 부도덕하고 사악한 공작정치를 자행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공작정치가 가담했던 인물들은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그들의 범죄를 파헤치고 극복하려는 작업은 극히 미미하다. 친일파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그리고 군부정권의 공작정치에 가담한 무리들이 여전히 명명거리는 곳에서 어떻게 정의가 제대로 설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나라의 정기를 바로잡고 후손들에게 정의로운 사회를 넘겨주기 위해 친일과 군부독재의 범죄는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2001. 10. 23. 한겨레)

### 4. 의문사 규명 거부해선 안된다

국군기무사령부의 행태가 대단히 실망스럽다. 지난달 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관계자가 80년대 대학생 ‘강제징집 및 녹화사업’과 관련한 의문사 사건의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기무사를 방문했으나 기무사는 이들의 출입조차 거부했다는 것이다.

기무사는 “당시 자료가 폐기됐고 향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적시하면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지난 시절의 술한 군의문사 사건에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할 말이 아니다.



70, 80년대 학생운동 탄압과 정보 수집을 위해 군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집단적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은 이제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10월에는 81년 11월부터 3년간 무려 1천1백여명의 대학생이 강제징집됐다는 사실이 의문사진상규명위 조사로 공개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무고한 생명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의혹도 그동안 끊임 없이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유신 시절의 대표적 의문사 중 하나였던 1973년 최종길 전 서울대 법대 교수 사건이 당시 중앙정보부 요원의 타살이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그런데도 과거 대학생 강제징집 및 녹화사업에 핵심역할을 맡았던 기무사는 그동안 “담당 부서가 폐지됐고 관련자는 모두 퇴직했다”는 등 책임회피성 변명만 거듭해 왔다. 기무사는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햇빛을 가리려는 몸짓을 계속하고 있을 것인가. 이번에 기무사가 보여준 행태는 권력기관들이 부끄러운 과거를 밝히는 일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1999년 12월 특별법이 제정돼 2000년 10월에 출범한 대통령 소속기관이다. 특별법 1조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위원회 구성자체가 1998년 10월부터 4백여일 간 계속된 의문사 유가족들의 국회 앞 천막농성으로 이뤄졌다. 어두웠던 과거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우리 시대의 소명이 돼 있는 것이다.

불행한 과거사는 뒤늦게나마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사건 당사자들이 치열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온전히 치유될 수 있다. 이번처럼 책임 있는 기관이 변명만 일삼는다면 작게는 유가족들의 한만 쌓여갈 뿐이고, 크게는 이 땅에 정의가 바로 서는 날이 요원해질 뿐이다. 기무사는 의문사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것만이 역사 앞에 바로 서는 길이다.(2001. 12. 17. 동아일보)

## 5. ‘녹화사업’ 전두환씨 지시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이 1980년대 운동권 학생들에 대한 ‘녹화사업’ 입안

을 직접 지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조만간 전 전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이다.

규명위는 당시 보안사령부 대공처장(대령)이었던 최모(64)씨가 “81년 청와대 보안사 간부 만찬 때 ‘운동권 대학생들 군 입소 후 군내에 불온낙서가 빈발하고 있다’는 군상황 보고를 들은 전 전 대통령이 꾸지람을 해, 보안사가 앞장서기로 하고 교육계획(녹화사업)을 세웠다”고 진술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씨는 또 “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구상은 내가 직접 했으며, 입안 후 대통령에게 보고해 결재도 받았다”며 “관련 서류를 현 기무사가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무사는 규명위의 자료제공 요청에 대해 “윤석양 일병보안사 정치사찰 폭로’ 사건을 계기로 90년 당시 보안사가 문제가 될만한 자료를 모두 폐기해버려 녹화사업 관련 자료도 없어졌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보안사령관 이었던 박준병(68)씨는 지난해 말 규명위 조사에서 “교육사업에 관해 보고를 받았으나 ‘6명이 죽었다’는 등의 구체적 사실과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대통령도 88년 5공 청문회 당시 “의문사 등을 보고 받지 못했다”고 증언하는 등 핵심관련자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있어 녹화사업에 대한 진상규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규명위 관계자는 “당사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현 규명위 조사방법으로 녹화사업의 실체를 밝히기는 쉽지 않다”며 “국회에서 규명위 권한을 강화한 새 ‘규명위법’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2002. 2. 20. 한국일보)

## 6. 베일 벗어지는 ‘녹화사업’

군 복무 중 보안부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다가 사망한 성균관대 학생 이윤성씨 의문사 사건이 타살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이 사건 수사관들과 보안부대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불온전단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혐의사실은 조작이라는 진술을 받아들였다.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진술도 있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이씨가 월북을 기도한 사실도, 불온전단을 소지한 사실도 없었으며, 부대 안 정구장 심판대에 목을 매 자살했다는 군 당국의 발표도 조작됐을 개연성을 말해주는 결정적인 단서로 볼 수 있다.

이씨를 연행한 이유가 불온전단 소지나 월북기도 혐의가 아니라, 녹화사업 때 문이었다는 진술은 간과할 수 없는 의미를 지닌다. 녹화사업이란 반정부 데모 학생들을 강제로 입대시켜 생각을 바꾸게 하거나, 이들을 학원정보 수집요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말하는 군사정권 시대 공안통치 수법이었다. 이씨를 학원프락치로 활용하려는 회유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은 그 사업의 비인간성과 폭력성을 고발하는 증언이기도 하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접수된 많은 군 관련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타살 가능성이 드러났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의 의미는 크다. 아들의 사망소식을 접한 유가족은 빨갱이로 몰아대는 당국의 서술이 무서워 곡 소리도 내지 못했다 한다.

어머니는 울화병 때문에 오랫동안 정신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이제 단서를 찾았으니 진상규명위는 조사를 서둘러 책임한계를 분명히 가려내고, 엄하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유가족을 위로해주기 바란다.(2002. 2. 23. 한국일보)

## 7. 신군부 '녹화사업' 국가기관 총동원

1980년대 초 집회 및 시위 관련 대학생들을 강제징집했던 이른바 '녹화사업'의 전모를 담은 당시 국군보안사령부의 공식문서가 최초로 공개됐다. 녹화사업이 당시 징집관련자와 피해자들의 증언 등을 통해 알려져 왔으나 공식문건으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이 문서는 보안사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던 녹화사업이 보안사 외에 치안본부, 검찰, 내무부, 문교부 등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총동원된 초법적인 인권 유린 행위였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8일 보안사가 1988년 국회 5공비리 특위에 제출한 '학번자(특수학적변동자) 특별정훈교육 관련 진상'(소위 녹화사업)

문서(사진)를 14년만에 공개하고 "보안사가 1981년 11월부터 1983년 11월까지 집회 및 시위 관련 대학생 4백47명을 강제징집했으며 이중 2백65명이 특별정훈교육이란 이름으로 녹화사업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 강제징집

1981년 11월부터 2년 동안 집회 및 시위 관련 대학생 4백47명이 초법적인 형태로 강제 징집돼 별도로 관리받았다. 당시 병무청은 관련 학생의 병적기록부에 주도자는 '특수지원' 관련자는 '특수학번'이라는 적색 고무인을 찍어 별도로 관리토록 시달, 전과자로 분류하는 반인권적 행위를 저질렀다.

이들은 징병적령 여부, 징병검사 실시 여부, 신체상태 여부, 수형사유 및 소집 면제 여부 등의 사유와 상관없이 최우선적으로 입영했으며 육군 최전방관측소(GOP) 부대나 해군 함상근무 등 최전방 특수지에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제징집을 위해 내무부는 입영대상자를 문교부에 통보하는 업무를 맡았고, 문교부는 통보 받은 인원에 대한 특수학적 변동조치를 담당했다. 또한 병무청은 문교부 명단 중심으로 입영대상자 지원서를 접수했고, 국방부는 병무청 보고로 육·해군본부에 입영부대 및 일시를 지시했다. 보안사는 강제징집에서부터 대상자가 부대에 배치된 뒤 동태 파악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했다.

### 녹화사업

녹화사업은 강제징집된 대학생 4백47명중 2백65명에게 특별정훈교육이란 이름으로 1982년 9월부터 1984년 11월까지 실시됐다. 보안사는 이를 위해 1982년 9월 6일 녹화사업 업무전담과까지 신설했으며 이 해 9월부터 4개월 간 대학생 32명을 대상으로 1주일씩 녹화사업 시험교육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1983년 1월과 9월 2차례 녹화사업 전담 정훈장교 23명을 선발했으며 이들은 강제징집 대학생들이 배치된 전방 9개 사단과 4개 군단 지원 보안부대 등에 1명씩 배치됐다. 보안사는 녹화사업 전담 정훈장교의 선발기준으로 대학출신 학사장교, 사회과학 전공, 교내 동아리 활동의 경력이 있거나 신(新)좌경이론에



밝을 것 등을 제시했다.

녹화사업 대상자들은 보안사 모 분실이나 지역 보안부대에서 정훈장교와의 1대 1 대화 등을 통해 1주일간 순화교육을 받았으며 교육 이후에는 해당부대의 보안요원들이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관리했다.

보안사는 이 문서에서 정훈교육 대상자들은 원대복귀 전 2~3일간 휴가를 보내거나 필요시 정기휴가, 외출, 외박을 통해 학내사정을 제보토록 하는 등 녹화사업을 통한 프락치 공작을 총지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녹화사업 관련 군 의문사 6건과 관련해 “1988년 국회에 제출된 자료조차 위원회 출범 이후 1년여가 지나서 일부만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관계기관이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이라며 “아직도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녹화사업의 인권침해 실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2002. 2. 28. 국민일보)

## 제4장 명예졸업장

### 1. 허원근 일병 모교서 명예졸업장

군복무중 총탄에 맞아 억울한 죽음을 당했으나 18년간 자살로 은폐돼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허원근 일병이 모교로부터 명예졸업장을 받을 전망이다. 부산 부경대는 27일 “해양공학과 2학년을 마치고 군에 입대한 허 일병에 대해 명예졸업장 수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실무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부경대 관계자는 “과거 6·25전쟁 참전용사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한 전례가 있듯 국가를 위해 군복무중 억울한 죽음을 당한 허 일병도 이와 비슷한 경우”라고 말했다.

허 일병 아버지 영춘(63)씨는 이에 대해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정말 고마운 일”이라며 “앞으로 우리 아들처럼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2002. 8. 28. 세계일보)

### 2. ‘의문사’ 이운성씨 모교서 명예졸업장

지난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조사 결과 지난 83년 당시 보안사령부가 주도한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활용공작인 ‘녹화사업’ 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밝혀져 의문사가 인정된 고 이운성(당시 21세, 성대 2년 휴학)씨에게 명예졸업장이 수여된다.

이씨의 모교인 성균관대는 11일 이씨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키로 최종 결정하고 오는 25일 열리는 졸업식에서 유족에게 졸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이씨가 진상규명위 조사 결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숨졌음이 드러나 의문사로 인정받았고 교육부도 이씨에 대한 명예회복을 권고해 와 명예졸업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83년 군복무 중 월북을 기도한 혐의로 당시 보안사에서 조사를 받던중 자책감을 못 이겨 자살한 것으로 군 당국에 의해 발표됐지만 지난해 진



상규명위 조사 결과 80년대 초 보안사의 주도 아래 운동권 대학생들을 강제징집해 프락치로 활용한 소위 '녹화사업' 과정에서 희생됐음이 밝혀졌다.

한편 민주화운동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위법한 공권력의 개입과 죽음간의 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며 진상규명위가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린 고 최은순(당시 21세, 동국대 2년 휴학)씨에 대해서도 명예졸업장을 수여한다고 최씨의 모고인 동국대측이 이날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고인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는지만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인정됐고 교육부 측에서 고인에 대한 명예회복을 권고한 점을 감안, 내부검토를 거친 뒤 명예졸업장 수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2003. 5. 2. 연합뉴스)

### 3. '의문사' 김두황씨 모교서 명예졸업장 수여키로

지난 83년 군에 강제 징집된 뒤 부대 내에서 총상을 입고 의문의 죽음을 당한 고 김두황(당시 22세, 고대 경제학과)씨에게 명예졸업장이 수여된다. 김씨의 모교인 고려대(총장 어윤대)는 최근 교무회의를 열고 올 여름학기 졸업식 때 김씨의 유가족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 조사 결과, 학생운동에 적극 가담하다 강제징집됐다는 점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김씨 사건의 경우 83년 당시 보안사령부가 주도한 강제징집과 프락치 활용 공작인 '녹화사업'을 포함, 위법한 공권력과 사망간에 직접적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아 '진상규명 불능' 결정이 내려졌다. 김씨 사건은 이 달 중순께 출범하는 2기 의문사위가 재조사하게 된다.

이로써 위원회에서 조사한 83건의 의문사 중 명예졸업장이 수여된 사건은 83년 강제징집된 뒤 '녹화사업' 과정에서 숨겨 '의문사'가 인정된 고 이윤성(당시 21세, 성대)씨, 81년 강제징집돼 보안사 조사 과정에서 숨진 정성희(당시 20세, 연세대)씨 그리고 김씨 사건과 같이 '진상규명 불능' 결정이 내려진 고 최은순(당시 21세, 동국대 2년 휴학)씨 등 모두 4건으로 늘어났다.(2003. 5. 2. 연합뉴스)

### 4. 건국대, 고 정진화씨에 명예졸업장

건국대(총장 정길생)는 13일 교무회의를 열고 군복무중 훈련을 받다가 사고로 숨진 고 정진화(당시 22세, 기계설계학과)씨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97년 이 대학 공대 기계설계학과에 입학해 2학년을 마치고 98년 12월 육군 모부대에 입대, 탄약관리병으로 복무하다가 전역을 한달 앞둔 2001년 1월 초 충북 영동 지역에서 실시된 비상훈련 도중 차량전복 사고로 순직해 국립대전 현충원에 안장됐다.

정씨는 사고 당시 '전역 전 휴가'를 나올 수 있었으나 휴가도 미룬 채 부대훈련에 동참하겠다고 자청해 후임병들과 함께 훈련을 받다 뜻밖의 사고로 변을 당했다. 부대측은 정씨가 복무 중 모범사병으로 선정돼 부대장표창을 받았을 뿐 아니라 평소 성실했다는 점을 고려, 사고가 난 후 추모비를 건립했다. 부대측은 또한 추모비 건립일을 전후해 2년째 체육대회를 열고 있으며 부대발전에 공헌한 병사에게 '정진화상(賞)'을 수여하는 등 고인의 군인정신을 기려왔다. 명예졸업장은 오는 22일 열리는 '200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정씨의 부모에게 전달된다.(2003. 8. 13. 한국일보)



## 제5장 사건별 주요내용

### 이운성 사건

#### 1. 의문사유가족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지난 83년 5월 보안부대에서 조사 받다가 월북기도 혐의까지 받고 의문사한 이운성(성균관대 81학번)씨 유가족이 24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유가족은 이날 오전 서울지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법의 미비점, 위원회의 한계 등으로 군의문사 관련 사건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절박한 상황에서 사법부의 권한과 민사소송절차상의 증인제도, 재판부의 석명권 행사 등에 실낱 같은 희망을 걸고 진실규명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양승규)는 지난 80년대 운동권 학생들을 강제로 징집, 군에서 순화교육을 시킨 이른바 ‘녹화사업’ 관련 의문사 5건을 조사중이며, 특히 최근 이씨 사건 조사과정에서 월북기도 혐의가 당시 보안사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을 확인해주는 일부 사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2001. 10. 24. 연합뉴스)

#### 2. ‘의문사 성대생’ 사망전 ‘녹화사업’ 조사 받아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는 21일, 83년 5월 월북 기도혐의로 조사를 받다 자살했다고 군 당국이 발표했던 이운성(당시 21세·성균관대 휴학생)씨가 실제로는 ‘녹화사업’을 이유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최근 당시 보안부대 관계자들로부터 “이씨를 연행한 것은 월북기도와 불운전단 소지 혐의가 아니라 녹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이씨가 조사중 가혹행위로

사망했는지에 대한 증거와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무사가 지난 90년 10월 윤석양 이병의 양심선언 이후에도 민간인 사찰을 계속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진상규명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2년 8월 의문사한 박태순(당시 27세)씨가 활동했던 노동운동 조직을 내사했던 당시 기무사 요원이 “91년 11월 박씨의 자취방 등에 대한 수색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기무사 측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에 대한 일반적인 신원확인 절차였을 뿐 민간인 사찰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2002. 2. 21. 조선일보)

#### 3. “이운성씨 사망전 운동권 친구 만나”

1983년 군복무중 월북기도 혐의로 보안사의 조사를 받다 자책감을 못 이겨 자살한 것으로 발표된 이운성(당시 21세, 성대 2년 휴학)씨가 사망 한달 전쯤 식구들 몰래 운동권 친구들을 만나고 다녔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씨가 당시 보안사의 녹화사업 과정에서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다 희생됐을 가능성이 다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씨의 같은 과 친구였던 최모(41, 성대 사학과 졸업)씨는 29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씨가 사망 한달 전인 83년 3월말에서 4월초께 학교로 찾아와 ‘씨클은 잘 되냐’ ‘다들 뭐하냐’는 등 안부를 묻다 ‘누굴 또 만나야 한다’며 바빠 자리를 떴다”며 “당시 같은 과 친구였지만 별로 친하지 않아 왜 나를 찾아왔을까 의아해 했다”고 증언했다.

또 최씨는 “당시 이씨의 표정이 매우 밝아 한달 후 자살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며 “이씨를 만난 술집은 그 무렵 항상 운동권 학생들로 붐볐던 곳”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씨의 매형 박정관씨는 “이씨는 시위과정에서 경찰에 체포돼 강제징집 당한 후 한번도 집으로 휴가를 나온 적이 없다”며 “당시 학교와 집이 한 시간 거리밖에 안됐는데 친구들만 만나고 부대로 돌아갔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이은경 사무처장도 “이씨의 휴가는 가족조차 전혀 몰랐던 사실인 만큼 정상적인 휴가가 아니라 보안사의 강요에 의한 ‘프락치



활동'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의 증언을 바로 위원회측에 제보했다.(2002.

4. 30. 내일신문)

#### 4. 강제징집 이운성씨 '프락치' 강요당한 듯

강제징집을 당한 뒤, 1983년 5월 보안사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운성(당시 21살) 씨가 운동권 학생들을 통해 운동권 동향을 파악하게끔 하는 이른바 '녹화사업' 과정에서 망원(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운성씨의 성균관대 사학과 동기 최아무개(41)씨는 29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운성이가 죽기 한달 전쯤 학교앞 술집에서 만나 대화를 나눴다"며 "친한 사이도 아닌데 내가 속한 동아리 사람들의 안부를 물어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군 조사 기록에는 이씨가 사망 직전까지 휴가를 나온 사실이 없으며, 가족들도 휴가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82년 11월 강제징집당한 이운성씨는 83년 5월 4일 숨졌으며, 당시 군부대는 자살로 결론내린 바 있다.(2002. 4. 30. 한겨레신문)

### 김두황 사건

#### 1. 5공 군의문사 타살시사 물증 발견

5공화국 당시 학생운동 참가자가 군복무중 사망, 자살로 처리된 사건들 중 자살 가능성을 낮추는 결정적 물증이 최초로 발견됐다. 8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3년 군 복무중 의문사한 고려대생 김두황(당시 23살)씨의 유서라고 당시 군 수사당국이 발표한 필적이 김씨의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씨 사망사건을 다룬 군 헌병대는 김씨의 호주머니에서 김지하 시인의 '끝'이라는 시를 옮겨 적은 편지가 발견되자 이를 김씨가 작성한 유서라고 유족에게 제시하고 김씨의 사인을 자살이라고 발표했다.

군은 '죽기 전에 기어이 결별의 글 한 줄은 써두고 가마'라는 시 구절과 편지지

의 필적이 김씨와 동일하다는 당시 육군과학수사연구소(현 국방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 감정결과를 근거로 김씨가 군생활을 비판해 자살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유족들의 의문 제기로 조사에 나선 위원회는 지난달 하순 김씨의 학생운동 시절 한 동료로부터 '김씨에게 시를 적은 편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 국방과학수사연구소에 이 동료의 필적감정을 의뢰한 결과 문체의 편지 필체와 동일하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

위원회 관계자는 "김씨가 이 편지를 썼다는 당시 감정결과가 군 당국에서 김씨의 죽음을 자살로 결론지은 유일한 근거"라고 밝혀 김씨가 자살했다는 과거 군 발표가 사실상 허위로 판명됐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김씨의 타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상황에 대한 정밀조사 등을 통해 김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힐 방침이다.

김씨는 고려대 경제학과 4학년 재학중인 83년 학생운동과 관련해 강제징집됐다. 그 해 6월 18일 육군 모 부대 안에서 총상을 입고 머리 부분이 없는 시신으로 발견됐다.(2001. 6. 8. 연합뉴스)

#### 2. "군의문사 김두황씨 유서는 친구 필적"

1983년 군 복무중 자살한 것으로 발표됐던 고려대생 김두황(당시 23세·학생운동으로 강제 징집)씨의 의문사 사건에 대해 당시 발표내용을 뒤집는 증거가 나왔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는 8일 "사고 당시 군 당국이 '김씨가 작성했다'고 유족 측에 제시했던 유서는 김씨의 동료가 김씨에게 보냈던 편지였다"면서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필적 감정을 의뢰한 결과 김씨 동료가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이 조직적으로 김씨의 타살 가능성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군은 "김씨의 옷 주머니에서 자살을 의미하는 구절이 담긴 편지가 발견됐다"면서 "육군과학수사연구소(현 국방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 감정 결과 김씨 필적이 맞다"고 유족에게 통보하고 김씨가 자살했다고 발표했었다.(2001. 6. 9. 중앙일보)



### 3. 군의문사 대학생 타살유력 증거발견

1983년 군복무 중 의문사한 고려대생 김두황(당시 23살)씨의 타살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증거가 발견됐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는 8일 “사건 당시 군 당국이 김씨의 유서라고 발표한 글을 정밀조사한 결과, 김씨의 필적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며 “김씨가 타살당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시 김씨 사망사건을 다룬 군 헌병대는 김씨의 호주머니에서 김지하 시인의 ‘끝’이라는 시를 옮겨 적은 편지지가 발견되자, 이를 김씨가 작성한 유서라고 유족에게 제시하고 김씨의 사인을 자살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군은 ‘죽기 전에 기어이 결별의 글 한 줄은 써두고 가마’라는 시 구절이 적힌 편지의 필적이 김씨와 동일하다는 당시 육군과학수사연구소(현 국방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 감정 결과를 근거로 김씨가 군생활을 비판해 자살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의문사규명위원회는 지난달 김씨가 학생운동을 하던 시절의 옛 친구로부터 “김씨에게 시를 적은 편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국방과학수사연구소에 필적 감정을 의뢰한 결과, 문제의 편지 필체가 김씨가 아닌 김씨 친구의 것과 동일하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

위원회 관계자는 “김씨가 이 편지를 썼다는 당시 감정 결과가 군 당국에서 김씨의 죽음을 자살로 결론지은 유일한 근거”라며 김씨가 자살했다는 과거 군 발표가 사실상 허위로 판명됐음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사건 당시 정황에 대한 정밀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방침이다.

김씨는 고려대 경제학과 4학년 재학 중이던 지난 83년 학생운동과 관련해 강제징집됐다, 같은 해 6월18일 육군 한 부대 안에서 총상을 입고 머리 부분이 없는 주검으로 발견됐다.(2001. 6. 9. 한겨레신문)

### 4. ‘군의문사’ 18년 만에 재조사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8일 “1983년 군 복무중 의문사한 고려대생 김두황(당시 23살)씨의 유서라고 당시 군 수사당국이 발표한 필적이 김씨

의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김씨 사망사건을 다룬 군 헌병대는 김씨의 호주머니에서 김지하 시인의 ‘끝’이라는 시를 옮겨 적은 편지지가 발견되자 육군과학수사연구소(현 국방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 결과를 근거로 김씨가 군생활을 비판해 자살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유족들의 의문 제기로 조사에 나선 위원회는 지난달 하순 김씨의 학생운동 시절 한 동료로부터 ‘김씨에게 시를 적은 편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 국방과학수사연구소에 이 동료의 필적감정을 의뢰한 결과 문제의 편지 필체와 동일하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김씨의 타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상황에 대한 정밀조사 등을 통해 김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힐 방침이다. 김씨는 고려대 경제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83년 학생운동과 관련해 강제징집됐다가 그 해 6월18일 육군 모부대 안에서 총상을 입고 머리 부분이 없는 시신으로 발견됐다.(2001. 6. 9. 세계일보)

### 5. 군의문사 대학생 타살 유력 증거발견

1983년 군복무 중 의문사한 고려대생 김두황(당시 23살)씨의 타살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증거가 발견됐다.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는 8일 “사건 당시 군당국이 김씨의 유서라고 발표한 글을 정밀조사한 결과, 김씨의 필적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며 “김씨가 타살당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시 김씨 사망사건을 다룬 군 헌병대는 김씨의 호주머니에서 김지하 시인의 ‘끝’이라는 시를 옮겨 적은 편지지가 발견되자, 이를 김씨가 작성한 유서라고 유족에게 제시하고 김씨의 사인을 자살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군은 ‘죽기 전에 기어이 결별의 글 한 줄은 써두고 가마’라는 시 구절이 적힌 편지의 필적이 김씨와 동일하다는 당시 육군과학수사연구소(현 국방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 감정 결과를 근거로 김씨가 군생활을 비판해 자살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의문사규명위원회는 지난달 김씨가 학생운동을 하던 시절의 옛 친구



로부터 “김씨에게 시를 적은 편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국방과학수사연구소에 필적 감정을 의뢰한 결과, 문제의 편지 필체가 김씨가 아닌 김씨 친구의 것과 동일하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위원회 관계자는 “김씨가 이 편지를 썼다는 당시 감정 결과가 군 당국에서 김씨의 죽음을 자살로 결론지은 유일한 근거”라며 김씨가 자살했다는 과거 군 발표가 사실상 허위로 판명됐음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사건 당시 정황에 대한 정밀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방침이다. 김씨는 고려대 경제학과 4학년 재학중이던 지난 83년 학생운동과 관련해 강제징집됐다가, 같은 해 6월 18일 육군 한 부대 안에서 총상을 입고 머리 부분이 없는 주검으로 발견됐다.(2001. 6. 9. 한겨레신문)

## 여원근 사건

### 1. 18년만에 아들 죽음 진상 밝혀낸 아버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중간조사결과, 지난 84년 군 당국에 의해 ‘중대장의 학대를 비판한 총기자살’로 발표된 허원근(당시 22세)일병의 사망원인이 군 하사관에 의한 타살로 밝혀진 20일 허 일병의 아버지 허영춘(63)씨는 아들의 죽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던 18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이날 브리핑에 직접 참석해 조사결과 발표를 예상외로 담담한 표정으로 들은 허씨는 발표 중간 눈을 감은 채 천장을 바라보는 등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허씨는 “평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곤 했던 아들이 나약하게 자살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며 군 당국으로부터 아들의 자살 발표를 전해 들은 후부터 18년에 걸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전남 진도의 평범한 농부였던 허씨는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지회장을 맡는 등 아들의 죽음 이후 생계를 팽개치고 진상규명에 매달렸다. 사건 직후부터 청와대, 헌병대 등 각계에 청원서를 수십번 넣었지만 결과는 그때마다 동일하게 자살로 결론이 났고 군 헌병대로부터는 “백번 천번 탄원해도 소용없

다, 몸 조심하라”는 소리까지 들어야 했다.

그렇지만 허씨는 포기하지 않고 단식농성에 참여했고 법의학 책을 읽는 등 노력을 계속해 아들의 사망원인을 밝혀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허씨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가해자들에 대해서 어떤 처벌이나 배상을 원하기보다는 ‘아들을 죽였다’는 사실만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허씨는 진상규명위의 조사결과가 나온 후 아들에게 맨 처음 총을 쏘던 하사관에게 편지를 보내 “아들이 자살한 것이 아니라는 것만 인정한다면 모든 걸 용서하겠다”고 말했다.

허씨는 “나라를 위해 군에 갔는데 이렇게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간다면 누가 아들을 군대에 보내려고 하겠느냐”며 “앞으로도 내 아들의 죽음뿐만 아니라 전체 군의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허씨는 사건의 진상이 완전히 밝혀지면 그동안 경기 마석 모란공원 납골당에 보관했던 아들의 화장한 유해를 정식으로 매장하고 아들을 가슴에 묻을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2003. 8. 20. 연합뉴스)

### 2. 84년 자살발표 허원근씨, 상관이 총기살해·은폐

강제징집 당한 대학생 출신 사병이 숙취한 중대 간부의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을 군 부대가 조직적으로 자살로 조작한 사실이 18년 만에 밝혀졌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984년 4월 2일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 병영 안에서 총기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던 허원근 일병(당시 22살)이 중대 선임하사가 쏜 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규명위가 이 사건에 관련된 군관계자 등 2백여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허 일병은 사건당일 새벽 2~4시 중대간부 진급 축하 회식 술자리 심부름을 하던중 술안주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만취한 선임하사가 쏜 총에 오른쪽 가슴을 맞고 숨졌다.

사고 사실은 즉시 대대와 연대에 보고됐으며, 대대 간부들은 중대장 등과 대책을 논의한 뒤, 사고현장을 깨끗이 치우고 오전 10~11시께 허 일병의 시신을 유류창고 옆으로 옮겨 다시 시신에 두 발의 총격을 가해 자살로 위장했다. 이어



중대장은 “오전 10~11시 총성을 듣고 창고로 가보니 허 일병이 숨겨 있었다”고 신고하는 등 군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사건조작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고 규명 위족은 설명했다.

당시 7사단 헌병대는 허 일병이 부대 안에서 중대장의 가혹행위에 못 이겨 자신의 총기로 왼쪽 가슴, 오른쪽 가슴, 머리 등에 세 발의 총을 쏘아 자살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지었다. 이 사건은 그 후 유족들의 진정에 따라 2군단 헌병대, 육군범죄수사단, 국방부 사망사고 재조사위원회에서 다시 조사했으나 모두 자살로 결론지었다.

위원회는 “이 사건은 타살이 자살로 위장되는 군의문사의 대표적 사례”라며 “앞으로 이 사건 조작·은폐의 지휘계통을 밝혀나가는 과정에 관련자들의 협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 사건이 이미 공소시효(15년)가 지나, 허 일병을 숨지게 한 당시 선임하사(제대)를 비롯해 관련자를 처벌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허 일병은 부산 수산대 3학년 때인 83년 강제징집됐다.(2003. 8. 21. 한겨레신문)

### 3. 국방부 ‘허 일병 자살은폐’ 특별조사 착수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군의 자살조작 및 은폐 의혹이 제기된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에 대해 국방부가 27일부터 특별조사에 착수한다. 황의돈(黃義敦)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정수성 육군중장(1군 부사령관)을 단장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그동안 의문사진상규명위가 제기한 각종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며 “자살조작 및 은폐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조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의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의문사진상규명위의 협조도 요청하기로 했다.(2002. 8. 26. 조선일보)

### 4. 허일병 사건 의혹과 군 특별조사

자살조작 및 은폐 의혹이 제기된 1984년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특별조사가 27일부터 본격화된다. 사망 당시인 84년부터 95년까지 육군은 모두 5차례의 민원을 접수, 그때마다 육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해 ‘자살’로 결론지었으나 최근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에서 자살조작 및 은폐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번 국방부의 특별조사에서 그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 처벌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 7사단 헌병대 수사결과

사망한 지 4주가 지난 뒤 작성된 84년 4월 30일 7사단 헌병대의 수사결과는 허 일병이 M16을 이용, 자살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 수사결과에 따르면, 허 일병은 84년 4월 2일 오후 1시 20분께 중대본부에서 남쪽으로 약 30미터 떨어진 폐유류고 나무울타리 옆에서 3발의 총알을 맞고 숨진 채로 밥을 타러 가던 중대본부 요원 2명에 의해 발견됐다는 것이다.

7사단 헌병대는 당시 수사를 통해 허 일병이 M16소총을 처음에는 오른쪽 가슴에, 두 번째는 왼쪽 가슴에 밀착, 자살을 시도했으나 치명상을 입지 않자, 다시 오른쪽 눈썹에 밀착해 사격함으로써 ‘두개골 파열로 인한 사망’으로 결론을 내렸다.

수사결과는 또 허 일병이 자살을 결심한 동기를 ‘소속 중대장의 이상성격에 의한 혹사를 비판했다’고 결론지었고, 자살장소까지 가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는 84년 4월 2일 오전 중대장이 철책근무 순찰을 나가는 시간을 기회로 15발들이 탄창 2개를 훔치고 자신의 지급총기 M16소총을 휴대하고 내무반을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의 7사단 헌병대 수사결과는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가 군으로부터 넘겨받은 당시 수사자료에 따른 것이다. 이후에도 84년 2군단 헌병대 수사, 육군 범죄수사단 수사 등에서도 자살로 결론이 내려졌으며, 96년 국민고충처리위에서 국방부에 재조사 권고안을 제출했으나 국방부의 반응이 없었고, 99년 이후 국방부의 민원제기 사망사고 재조사가 진행되던 중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중지되고, 의문사진상규명위로 넘겨졌다.



##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사건 재구성

허 일병은 사건 당일인 84년 4월 2일 오전 2~4시께 한 초소장의 진급축하를 위해 중대본부에서 열린 술자리에서 소속 중대장이 “라면 맛이 없다”고 모 하사관을 질책하자, 그 하사관이 만취상태에서 중대본부를 나와 자신의 M16소총을 들고 행패를 부리다 허 일병을 향해 우발적으로 발사, 허 일병은 오른쪽 가슴에 총을 맞고 숨졌고, 곧이어 허 일병의 주검을 향해 2발을 더 발사한 것으로 당시 목격사병들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의문사진상규명위는 밝히고 있다.

## 제기된 의혹

허 일병 사망 당시 중대본부에서 술마신 중대간부 이외에도, 중대본부 주변과 인근 내무반에 있던 8명의 사병 등 모두 11명이 목격했다는 것. 중대간부들은 근무지 이탈 및 술자리에 대한 문책이 우려되자 허 일병이 낮시간대에 자살한 것으로 처리키로 했고, 이어 열린 대책회의에서는 사고 직후 보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대급 간부들까지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게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조사결과다.

의문사진상규명위에 따르면 또 군 헌병대의 조사 때 목격한 사병들을 상대로 무릎에 곤봉 끼우고 짓밟기 등 가혹행위가 있었고, 조사후 포상휴가가 주어졌을 뿐 아니라 알리바이 조작과 증거조작 등을 위해 역할을 분담하는 특별교육이 있었다. 특히 허 일병이 첫 발을 맞고 숨졌는데도 불구하고, 곧이어 2발을 더 쏜 대목도 ‘공포 분위기’ 조성과 관련돼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또 허 일병에게 총을 발사한 하사관의 경우 아무런 징계조치도 받지 않고 사단내 다른 중대로 전보된 뒤 진급해 90년초 상사로 예편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건 당일 오전 2~4시께 대대급 간부까지 참석한 대책회의에서 자살로 처리키로 했고, 오전 7시께 연대에 ‘자살사건’으로 보고된 데 이어 오전중 사단 단위까지 보고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단 헌병대 조사에서 사건발생 시간이 ‘오후 1시20분’으로 처리된 수사결과에 대해 연대와 사단 어느 곳에서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상급부대의 조직적인 개입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 국방부 특별조사위 구성과 전망

국방부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정수성 육군중장(1군 부사령관)을 단장으로 군 수사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한편, 법의학 등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나아가 의문사진상규명위의 협조도 요청하기로 했다.

벌써부터 군 일각에서는 의문사진상규명위의 발표대로 이 사건의 조작 및 은폐가 있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국방부가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일말의 의혹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 사건의 진상을 은폐했거나 허위조작에 가담했던 인원들은 모두 이에 상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내 진상규명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특별조사위 활동을 통해 ‘자살조작 및 18년간 은폐’라는 진상이 밝혀질 경우 문제의 하사관과 중대장 등 사건 관련자들과 대책회의에 참가했던 군 간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살로 결론 지은 군 수사관계자들이 처벌대상이 될 전망이다.(2002. 8. 26. 연합뉴스)

## 5. 허원근 일병 사건 부대서 현장검증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허원근 일병 자살 조작 은폐사건’과 관련해 3일 사건현장인 강원 철원군 원동면 7사단 1대대 3중대에서 현장조사를 가졌다. 이날 오후 1시부터 1시간반 동안 진행된 현장조사에서는 당시 허 일병의 자살을 조작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추가적으로 공개됐다. 또 사건 발생 상황이 재연됐고, 시신 발견지점 확인이 이뤄졌다.

진상규명위는 이와 함께 당시 대대 상황실로 ‘허 일병 자살’ 보고가 올라가기 전에 이미 인근 4중대에서 ‘중대원이 총성을 들었다’는 보고를 했다는 상황실 관계자의 진술도 공개했다.(2002. 9. 4. 동아일보)

## 6. 의문사위, 허원근 일병 ‘타살’ 결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1984년 군 복무 중 자살했다고 발표



됐던 허원근(당시 22세)일병 사건에 대해 “許 일병이 같은 중대 간부에 의해 타살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는 최종 조사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날 “許 일병 소대 동료 중 일부의 진술과 법의학자 소견, 그리고 대대와 연대 상황병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며 허 일병은 84년 4월 2일 오전 2~4시 사이 만취상태인 노모 중사가 쏜 총에 맞은 뒤 이를 은폐하려는 부대 관계자들에 의해 두발의 실탄을 더 맞고 숨졌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사망 시간과 관련해 재미 법의학자에게 감정을 의뢰한 결과 허 일병이 첫 총상을 입은 뒤 7~8시간 동안 생존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서를 보내왔다”면서 “이는 許일병이 실탄 세발을 연달아 쏘 자살했다는 군 헌병대의 수사 결과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실탄 두발을 누가 쏘는지 △사건의 은폐·조작이 누구의 지시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등에 대해선 “일부 관련자들의 진술은 있으나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하지 않았다.(2002. 9. 11. 중앙일보)

## 7. ‘허 일병 타살’ 의문사위 판정 뒤집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타살 판정이 내린 허원근 육군 일병 사망사건을 재조사하는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타살판정을 뒤집기 위해 짜맞추기식 조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대한변호사협회가 특조단에 인권 자문위원으로 파견한 변호사가 중요한 조사과정에서 제외됐다며 사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특조단은 진상규명위가 1984년 4월 2일 육군 7사단에서 사망한 허원근 일병은 타살당했으며 군에서 은폐, 조작했다고 공식발표하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28일 출범, 재조사에 나섰다.

이달 초 특조단에 인권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가 최근 사퇴한 전모 변호사는 “대한변협 인권위원 자격으로 파견됐으나 노모 중사 인권침해 부분 조사 등 특조단의 요구사항과 절충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18년이 지난 사건이라 참고인 조사가 가장 중요한데 그 과정에 참여하지 못해 실제적 절차적인

조사참여가 어렵다고 판단해 사퇴했다”고 밝혔다.

특조단 자료 중 인권변호사 자문사항 관련내용을 보면 ‘(진상규명위가 범인으로 지목한)노중사가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가, 진상규명위 조사방법 및 기법이 합당한가’ 등 사건 실제 규명보다는 진상규명위 활동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특조단 조사에 참여했던 일부 참고인들이 증언번복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참고인 조사에 응했던 김모씨(41)는 “특조단 조사관들이 자살로 입증할만한 유도질문을 계속해 정치적 의도로 이 문제를 접근하지 말라고 반박했다”며 “18년 전 본대로 진술하면 조사관들이 ‘우리는 믿을 수 없다, 군의 위상이 떨어지고 국민들이 군에 반감을 가지는 것을 책임질 수 있느냐’며 흥분했다”고 말했다.

참고인 정모씨(39)는 “말썽이 많은 조사였다”고 전제한 뒤 “당시 대대장이 대질신문에 참석, 참고인들에게 ‘말 잘해라, 형사고발까지 갈 수 있다’며 위압적 분위기를 조성해 특조단장이 만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참고인은 “조사과정에서 누구는 이렇게 번복했으니 다시 생각해 보라며 기존 진술을 뒤엎은 사람들의 진술자료를 보여주면서 진술번복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조단 내부에서도 재조사를 하면서 자살로 수사종결한 과거 헌병대 수사기록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조단 관계자는 “이번 재조사의 목적은 허 일병 사망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지, 진상규명위를 공격하는데 있지 않다”며 “이번 주초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참고인들에 대한 증언번복 강요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2002. 10. 28. 국민일보)

## 8. “허 일병 자살” “타살” 엇갈린 결론

허원근 일병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국가기관인 국방부와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정면 충돌했다. 특히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의문사위가 사건



을 날조·조작했다고 비난하자, 의문사위가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반박하는 등 감정대립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 '타살은 날조조작된 것'

국방부 특조단(단장 정수성, 鄭壽星 육군중장)은 28일 오전 허 일병 사망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3개월 동안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원점에서 재조사한 결과 허 일병은 중대장 전령업무에 대한 심적 부담 등으로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의문사위의 9월 10일 “허 일병이 타살됐다”는 조사 발표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특조단은 이어 “의문사위는 9월 현장검증에서 허 일병의 키(181센티미터)를 고려치 않고 키 작은 대역을 쓰고, 각본에 짜맞추기 위해 참고인들을 강압과 유도심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조단은 또 “사고 당일인 84년 4월 2일의 각종 부대기록을 분석한 결과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모두 3발의 총성이 청취됐다”며 “당시 노모 중사가 내무반에서 허 일병을 쏘지 않았고 제3자에 의한 타살도 없었다”고 말해 당일 새벽 노 중사의 오발탄에 허 일병이 맞았다는 의문사위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조단은 이와 함께 허 일병의 좌우가슴에 난 총상의 색깔 차이에 대해서는 법의학자들의 소견을 들어 “시간차 때문(의문사위 주장)이 아니라 총구와 의복의 밀착여부가 다르기 때문”이라며 “1995년에도 병사가 3발의 총알로 자살한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조단은 이에 그치지 않고 타살로 증언한 참고인 2명에게 지급될 보상금 3천만원도 국가에 반납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타살로 날조·조작함으로써 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중대한 과오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 '군 수사는 오류와 모순 투성이'

이에 대해 의문사위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의문사위는 이날 오후 “특조단이 오류와 모순 투성이인 당시 군 수사결과를 신뢰, 의문사위의 조사결과 반박에만 매달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문사위는 “허 일병이 손을 바꿔가며 M16소총으로 세 발을 쏘 자살할 수 있는가 하는 상식적 의문에 대해서도 군은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며 “특조단이 현장검증에서 허 일병보다 키가 작은 대역을 썼다는 등 지엽말단적인 부분을 들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문사위는 “특조단의 발표대로 허 일병이 중대장의 만행을 고발하기 위해 자살했다면 이는 군내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차기위원회가 내년 3월 활동을 재개하면 재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재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국방부는 “허 일병사건은 민주화운동 의문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문사위가 재조사에 나서서는 안된다”고 제동을 걸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과 대립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2002. 11. 28. 한국일보)

## 9. 허 일병 사건 재조사 필요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을 재조사한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그의 죽음을 자살로 결론짓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이를 반박하는 등 국가기관 사이에 충돌이 빚어졌다. 이에 따라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조사단의 재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방부가 자살로 최종 결과를 발표한 것은 중간발표 때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전문가들의 간담회와 법의학 공개토론회 결과 자살로 결론지었다는 내용 말고는 당시 부대원들이 위원회에서 했던 증언을 뒤집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들 부대원들은 국방부 조사 과정에서 무리하게 진술 번복을 강요당했음을 증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뒤바뀐 진술들을 근거로 국방부가 “의문사위원회의 조사관이 참고인 진술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막말까지 한 것은 비상식적이다.

국방부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기본이 되는 현장에 대해 납득할 만한 조사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건 발생 당시 탄피가 두개 발견된 것으로 기록돼 있는 현장검증 조서와 관련해 “다음날 찾은 탄피 한발을 추가로 그려 넣지 않아 생긴 잘못이었다”는 국방부의 발표는 설득력이 없다. 자살했다는 현장에



혈흔이 남아 있지 않은 의문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허 일병의 주검을 발견 현장이 아닌 중대본부 입구 등에서 목격했다는 증언이나, 허 일병의 손에 생긴 상처가 방어흔이라는 당시 부검의의 진술, 중대본부의 핏자국을 씻기 위해 물 청소를 했다는 증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의 재조사는 의문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반박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인상이 짙다. 오히려 국민의 의혹을 키우고 다른 국가기관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만 낳았다.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와 의문사위원회가 함께 참여하고 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인사 등으로 공정성이 보장되는 조사단을 구성해 이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 당시 부대원들에 대한 조사는 최대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2002. 11. 29. 한겨레신문)

## 한희철 사건

### 1. 83년 의문사 한희철씨 “녹화사업 가혹행위로 자살”

1983년 군 초소 근무중 가슴에 소총 실탄 3발을 맞고 숨진 채 발견된 서울대생 한희철씨(당시 22세)는 녹화사업 과정에서 받은 가혹행위를 비판해 자살한 것으로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밝혀졌다. 녹화사업은 신군부 시절인 1980년대 초 군과 관계당국이 일부 강제징집된 운동권 학생들에게 운동권 동료들에 대한 동향 파악 및 정보수집 등을 해오도록 강요한 비밀공작이다.

의문사진상규명위 고위 관계자는 26일 “1983년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한씨를 조사했던 국군 보안사령부 녹화사업 전담 정훈장교(당시 중위)로부터 ‘조사 도중 한씨를 몽둥이로 구타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씨가 12월 10일 근무지인 ○사단 본부대로 복귀한 뒤 부대동료 이모씨 등에게 대퇴부의 상처를 보이며 ‘보안사에서 전기고문을 두 번 당했고 이젠 사방에서 감시를 받는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특히 한씨가 초소근무를 같이 했던 후임병에게 맡긴 유서에서 녹화

사업 도중에 받은 고문에 대한 두려움과 동료들을 배신한 데 대한 양심의 가책 등을 적고 있는 점으로 미뤄 한씨가 녹화사업을 비판해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씨는 1983년 10월 군 정기휴가 도중 부천에서 함께 야학활동을 하던 한국의 국어대생 신모씨가 수배중임을 알고 동사무소에 근무하던 친구 전모씨에게 신씨의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줄 것을 부탁하는 편지를 썼다가 신씨가 검거되면서 편지가 들통나 보안사 과천분실에서 조사 받았다. 보안사 조사과정에서 한씨는 대학 1년 때부터 부대 복귀 전까지 활동상황에 대한 자술서 40여장을 썼으며 조사 마지막날 5일째 반성문과 서약서를 쓰고 분실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1979년 서울대 기계공학과에 입학한 뒤 대학 가톨릭학생회에서 활동해온 한씨는 4학년 때인 1982년 12월 1일 입대했으나 1983년 12월 11일 새벽 4시 35분쯤 육군 ○사단 사령부 비문합동보관소 경계보초 근무중 가슴에 총탄 3발을 맞아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은 한씨가 민주정치의 미흡성을 비판하고 빈곤한 사회생활에 대한 경제정의를 주장하다 유서를 써놓고 보초근무 도중 자살했다고 밝히고 수사를 종결했다.(2002. 4. 26. 국민일보)

### 2. “한희철씨 가혹행위 등 비판 자살한 것”

1983년 군 초소 근무중 숨진 서울대생 한희철씨(당시 22세)가 80년대 초 운동권 학생들의 강제징집 및 프락치 활용공작인 이른바 ‘녹화사업’ 과정에서 받은 가혹행위 등을 비판해 자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26일 “당시 한씨를 조사했던 국군보안사 녹화사업 전담 정훈장교로부터 ‘조사 도중 한씨를 둔기로 구타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한씨의 유서에 녹화사업 도중 받은 고문에 대한 두려움과 동료들을 배신한 데 대한 양심의 가책 등이 적혀있는 점으로 미뤄 한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82년 입대한 한씨는 이듬해 10월 휴가 때 아는 사이인 수배자 신모씨의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줄 것을 친구



에게 부탁했다가 이 사실이 탄로나 보안사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초소에서 근무하다 가슴에 실탄을 맞아 숨진 채 발견됐다.(2002. 4. 27. 동아일보)

### 3. 83년 서울대생 한희철씨 의문사 인정

1983년 경기 연천군 제5사단 사령부 초소에서 숨진 서울대생 한희철(당시 22세)씨가 신군부의 '녹화사업'(민주화운동 학생들에게 프락치 활동을 강요하는 것)과정에서 받은 가혹행위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에 따라 그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씨의 유서 등으로 비추어 볼 때 한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러나 그는 당시 보안사령부(현 국군기무사) 조사과정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죄책감 때문에 숨졌으므로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에 의한 의문사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희철씨 사건은 진상규명위가 의문사로 인정한 4번째 사건으로 자살로 판명된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위가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002. 6. 27. 동아일보)

### 4. “한희철씨 죽음, 공권력 위법 행사가 원인”

의문사진상규명위는 1983년 군부대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 실탄 3발을 맞고 숨진 한희철(당시 22세)씨가 민주화운동과 관련,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숨진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에 접수된 사건 중 자살로 판명된 사건에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한씨의 유서와 성남YMCA 총무에게 보낸 편지 등을 볼 때, 한씨는 자살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당시 보안사령부(현 기무사)의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가혹행위와 그로 인한 두려움과 좌절감, 죄책감 등에 기인한 것인 만큼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가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학생운동을 하다 82년 입대한 한씨는 이듬해 함께 야학활동을 하던 수배자 신모씨의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줄 것을 친구에게 부탁했다가 이 사실이 탄로

나 보안사에서 운동권 학생들의 강제징집 및 프락치 활용공작인 '녹화사업' 차원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근무지 초소에서 가슴에 실탄 3발을 맞아 숨진 채 발견됐다.(2002. 6. 27. 한국일보)

### 5. “내 아들 죽음 민주화 초석 되었으면”

“내 아들의 죽음이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초석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1983년 경기 연천군 제5사단 사령부 초소에서 숨진 서울대생 한희철(당시 22세)씨의 아버지 한상훈(74)씨와 어머니 김인연(71)씨는 27일 아들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한숨을 지었다. 26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한희철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을 접한 한씨 부부의 표정에는 20년 인고의 세월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 김씨는 “당시 군은 아들이 그저 자살했다고만 밝혔을 뿐 민주화운동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내 아들이 군에서 무슨 큰죄를 지었기에 죽었나 두려워하며 아들의 시신을 화장한 것이 평생 마음의 한이 된다”고 말했다. 한희철씨는 서울대에 재학중이던 83년 군에 입대한 뒤 '녹화사업'(민주화운동 학생들에게 프락치 활동을 강요하는 것) 과정에서 받은 가혹행위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2002. 6. 28. 동아일보)

## 임용준 사건

### 1. 임수경씨 오빠 ‘임용준 의문사 사건’ 분묘개장

제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오는 19일 경기도 양주군 양주읍 삼성개발공원묘원에서 군복무 도중 의문사한 임용준씨 사건을 정밀조사하기 위해 분묘 개장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2기 의문사위는 임용준씨 사건의 경우 현재 군당국의 수사기록 보존연한이 지나 참고자료가 남아있지 않은데다 총기에 의한 목 관통상으로 사망했다는 당



시 군의 발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분묘 개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기 의문사위는 또 총탄 발사 횟수도 총성을 1발과 3발을 들었다는 진술이 엇갈려 분묘 개장 후 유골을 수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정밀감정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용준씨 사건이란 1981년 연세대에 입학한 임씨가 연세대 교육방송국 기자로 활동하면서 학생운동에 동참했고 서대문 경찰서 정보과의 사찰을 받던 중 1984년 4월 군입대해 같은 해 11월 탄약고 경계근무 중 의문의 총상을 입고 사망, 군에 의해 자살로 발표된 사건이다.

1989년 전대협 대표로 북한을 방문했던 임수경씨는 오빠인 임용준씨 의문사를 1기 의문사위에 진정했고, 1기 의문사위가 이를 접수해 진상규명활동을 벌인 바 있다. 1기 의문사위는 그러나 타살 여부 및 학생운동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해 진상규명 불능으로 처리했고 임용준씨 사건은 2기 의문사위 출범과 함께 자동 재조사에 들어가게 됐다.

한편 분묘 개장에는 임수경씨, 아버지 임판호씨 등 유족들과 국과수 법의학자 2명, 인골을 전공한 형질고고학계의 민간전문가 1명, 의문사위 홍춘의 상임위원 등 1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2003. 11. 18. 연합뉴스)

## 2. '임수경 오빠' 분묘개장...유골감정 시작

제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19일 경기도 양주군 양주읍 산북3리 소재 삼성개발공원묘원에서 군복부중 사망한 임용준(당시 22세, 연세대 심리학과 4년)씨의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임씨의 묘 해체작업을 벌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한길로 박사 지휘로 이날 오전 11시 50분부터 실시된 묘 해체 작업은 유족과 의문사진상규명위 관계자들이 지켜본 가운데 1시간만인 12시 50분께 임씨의 유골이 들어있는 목관을 끌어올렸다. 이 목관에는 임씨의 유골과 매장 당시 입었던 군복과 양말이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었고 목관은 다소 부식돼 있었다.

제2기 의문사위는 임씨의 유골을 구급차를 이용, 이날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

소로 옮겨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한 감정에 들어갔다. 의문사위 한 관계자는 "유골 상태가 예상보다 좋아 사인 규명에 기대가 크다"며 "유골 감정은 총상의 방향 및 위치와 총탄 숫자 등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묘 해체작업은 임씨의 아버지 임판호씨와 어머니, 동생 임수경씨 등 유족과 허영춘(64)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 지회장 등이 지켜봤다.

임씨는 연세대 4학년 재학중인 84년 4월 군에 입대해 같은 해 11월 2일 탄약고 경계근무중 자살한 것으로 군 당국이 발표했다.(2003. 11. 19. 연합뉴스)

## 김 훈 사건

### 1. '군내 의문사 의혹 증폭'

육군이 단순 사고사로 발표한 사병의 죽음이 고참병의 폭행에 의한 것이었음이 뒤늦게 밝혀지는 등 군내 의문사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자민련 함석재 의원은 9일 국회 법사위 군사법원에 대한 국감에서 "지난 7월 20일 감전사한 것으로 발표된 육군 모사단 박현우 일병은 유가족이 PC통신에 의혹을 제기하는 등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해 군 당국이 재조사한 결과 고참병인 김모 상병에게 폭행 당한 뒤 감전사했음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함 의원은 또 "지난달 8일 육군 모사단에서 발생한 안성현 일병 자살 사건도 군 당국의 자살 발표를 재조사한 결과 자살 직전 고참병 박모 상병의 구타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회의 조순형 조찬형 이기문 의원과 한나라당 정형근 박현기 최연희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 2월 2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초소에서 권총 총탄에 머리를 맞아 숨진 채 발견된 김 훈(육사 52기) 중위 사건에 대해 타살 가능성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군 당국은 지난 4월 김 중위가 자살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유가족들이 △머리 상처와 총알 탄도가 자살자의 것으로 보기 어렵고 △권총에서 김 중위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자살 동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타살 의혹을 강하게 제기, 현재 육군 검찰부에서 정밀 수사를 벌이고 있다.(1998. 11. 9. 조선일보)



## 2. 군·검찰 합동조사단, '김 훈 중위 사망' 재수사

군 당국은 9일 김 훈 중위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해 국방부 건군 50주년 기념 사업단장 양인목 중장(육사 22기)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 이날부터 재수사에 착수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장과 기무부대장, 법무관리관, 민간 검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金중위 사망사건과 관련,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원점부터 재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군수사당국에서 金중위 사망사건에 대한 두 차례에 걸친 수사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타살 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의혹에 대해 끝까지 추적,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합동조사단은 또 수습 차례에 걸쳐 북한병사와 접촉, 지난 4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김영훈 중사(28)의 이적행위와 김 중위 사망사건 사이에 깊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조사단은 국회 진상규명 소위원회가 제기한 사건 발생 당시 金중위의 알리바이 및 사망시간 조작의혹, 병커에서 발견된 권총의 정체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국방부 고위관계자가 밝혔다. 특히 조사단은 국회 진상소위가 발표한 중간조사결과를 볼 때 金중위가 타살됐을 가능성이 매우 큰 점을 중시, 육군 검찰부의 조사과정에서 누락된 각종 타살의혹을 중점적으로 밝히기로 했다. 조사단은 이밖에 북한군과 접촉한 경비병 가운데 일부가 1천만원 상당의 롤렉스시계 등 고가의 선물을 상습적으로 건네 받은 점으로 미뤄 전역후 고정간첩 활동을 하도록 포섭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천용택 국방장관은 “김 훈중위 유족과 국회 진상소위 등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전면적인 수사를 벌이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모든 사실을 공개하라”고 긴급 지시했었다.(1998. 12. 9. 연합뉴스)

## 3. 김 중위 아버지 김 척씨 “전역병까지 찾아가 증거 수집”

“군에 평생을 몸담았던 사람이어서 진상을 밝히는데 더욱 힘이 들었습니다.” 김 훈 중위의 아버지 김 척(예비역중장)씨는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지난 10개월간 필사적으로 매달렸다고 했다. 김씨는 부인과 함께 처음 아들의 사망소식을 듣고 아들과 같은 부대에 있다가 전역한 한 병사를 찾아갔다. 묵묵부답인 그를 한달 반 동안 설득한 끝에 당시 사건의 진상을 들을 수 있었다고 했다. 김씨는 “당시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을 가능한 많이 만나고 증거를 찾기 위해 하루 3시간 이상을 자지 않았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아들이 자살 때 사용했다고 군당국이 제시한 권총의 총번이 원래 아들이 갖고 있던 총번과 다르다는 것을 제시하자 “그런 자료를 어떻게 구했느냐”는 말도 들었다. 김씨는 또 법의학 전문가인 루이스 노 교수를 어렵게 미국에서 데려와 반대증거를 댔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됐을 때는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다. 자신을 도왔던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 같아 연락도 제대로 취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래도 현역으로 몸담고 있는 군관계자와 전역한 병사, 국회 진상규명위원회 등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버틸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처음부터 우리의 주장은 어떻게 죽었는지만 명확히 밝혀달라는 것”이라며 “죽은 아들을 생각하며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군내 의문사 사건이 이제는 더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김씨는 아들의 사망사건을 군당국이 전면 재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1998. 12. 9. 조선일보)

## 4. '특조단 조사난항' 원점 맨들아

국방부가 지난 9일 특별조사단까지 발족해 판문점 북한군 접촉사건 및 김 훈 중위 사망사건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군 수사당국이 이번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김모 중사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긴급 구속해 조사를 시작한 것은 지난 4일. 지난 10여일 동안 수사당국은 김 중사를 상대로 북한군에 의한 포섭 및 김 중위 사망사건 연루여부를 집중 조사했으나 김 중사는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사당국은 지금까지 김 중사가 30차례 판문점 군사분계선상에서 북한군과 만났으나 단순 접촉이었으며, 군사분계선을 넘어간 것은 작년 12월 한 차례에 불과했다는 사실만 확인했다. 이때도 군사분계선을 넘어 포복으로 20~30미터쯤 기어가 북한 초소에 접근했으나 폐쇄돼 있어 북한군과 접촉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수사 당국은 전·현직 소대원 등 11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나 대부분 “김 중사가 북한군과 직접 접촉하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진술, 결정적인 정황증거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중사는 조사과정에서 “호기심과 특전사에서 쌓은 실력을 테스트하고 싶어 밤에 감시 카메라를 피해가며 군사분계선을 넘어 포복으로 접근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군 일각에선 지금 상태로는 김 중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공소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나, 수사당국은 메모지 등 어느 정도 물증을 확보하고 있어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혐의와 관련된 기소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수사당국은 김 중위 사망사건에 김 중사가 관련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하기도 했으나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 군 일각에서는 김 중위의 사망이 여전히 의문사로 남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방부 특조단은 이에 따라 미군 수사자료를 포함, 1, 2차 수사결과를 정밀 재검토하면서 김모 중사 외에 다른 사람이 타살 의혹에 관련됐을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10개월이 지난 데다 초동수사마저 부실해 물증을 찾아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양인목(육사 22기·육군중장) 특조단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국민들이 김 중위 사망사건에 대한 군 수사결과를 믿지 못하고 있는 만큼 언론과 유족, 국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모두 해명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1998. 12. 14. 조선일보)

## 5. 의문 해소 못한 군의문사 재조사

국방부는 김 훈 중위 사건이 사회의 이목을 끌게 된 것을 계기로 다른 의문사

사건에 대해서도 재조사에 나서고 있다. 이 업무를 처리하는 기구를 국방부에 신설했고, 각 군에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국방부 재조사의 의미는 의문사 때문에 안타까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유족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가 그런 뜻에 걸맞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아직은 그런 노력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일을 처리해 버리고 말 것 같은 기미조차 보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유가족이 재조사를 신청한 의문사 69건 가운데 13건에 대해 자살로 다시 결론을 낸 뒤 그 결과를 유가족에게 통보하고 있다고 한다. 국방부는 이미 결론을 낸 이 사건들이 “자필유서가 있거나 정황증거상 타살로 의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유가족들은 이 결론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들은 “현장조사나 참고인 진술도 듣지 않고 당시의 수사자료만을 재확인해 자살로 다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거세게 항의하고 있는 것이다. 군당국과 유가족들 사이에는 이처럼 깊은 불신이 깔려 있다. 다행히 국방부가 유가족들의 반발을 수용해 또다시 그 사건들을 조사하겠다고 그 결과를 지켜볼 일이다.

대부분 10년 안팎의 세월을 보낸 사건들을 뒤늦게 다시 들추어 그 숨은 진실을 밝혀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작업일 수는 없을 것이다. 사건현장이 사라졌거나 당시의 부대원들도 이미 뿔뿔이 흩어졌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당시의 수사자료에 기대어 책상머리에서 조사를 끝내고 마는 경우를 우려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군 내부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도, 또는 유가족의 아픔을 생각해서도 그렇게 불성실하게 재조사를 마칠 수는 없는 일이다. 지난날의 결론을 백지화한 상태에서 현장을 재구성해 보기도 하고, 관계자를 찾아 새로운 증언을 듣기도 하면서 실제적 진실을 찾으려 진력해야 마땅하다. 유가족이 제기하는 의문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민간 전문가의 법의학적 견해도 들어가면서 합리적인 결론을 얻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많은 군 의문사 사건이 80년대 군부독재정권 시절에 저질러진 것이라는 점에 국민들은 주목하고 있다. 물론 정확한 사인을 찾기 어려워 자살로 처리했을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건의 내막을 감추고 조작한 경우도 없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군 의문사 재조사는 유족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서만이 아니라, 이러한 국민의 의혹을 씻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1999. 3. 22. 한겨레신문)

## 6. 또 자살로 결론낸 김 중위 사건

판문점 김 훈 중위 의문사 사건 재조사에 나섰던 국방부는 어제 사인을 다시 자살로 결론지었다고 발표했다. 김 중위가 타살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으며, 업무부담 등을 못 이겨 자살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사건발생 9개월도 더 지난 시점에서 재수사에 나섰던 것은 김 중위 부대의 부소대장인 김아무개 중사가 북한군 초소를 여러 차례 방문하는 등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뒤늦게 사회의 주목을 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국방부가 68명이나 되는 수사요원으로 특별합동조사단을 편성하고, 유족이 추천하는 법의학자도 포함된 자문위원회도 구성해가면서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려 애쓰는 모습을 보여준 점은 평가할 만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노력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려는 국민 가운데서도 그 결론에는 선뜻 공감을 하지 않는 이들이 많을 것 같다. 그것은 사인을 처음처럼 자살이라고 결론 내려서만은 아닐 것이다. 국방부의 논거는 타살의 증거를 찾을 수 없는 데 있다고 하지만, 자살로 인정할 뚜렷한 증거도 없기는 마찬가지다. 충격사건이었기에 타살이 아니면 자살일 수밖에 없기는 하다. 그러나 역으로 자살의 증거가 뚜렷하지 않다면 타살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도 일면 성립될 수 있을 법하다. 그동안 자살이 아니라고 믿고 주장해 온 유족들이 제기한 의혹이 1백22가지나 된다. 특별조사단이 일일이 그 답을 찾았지만, 중요한 대목에서 유족들은 공감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국방부는 다른 모든 군의문사 사건들도 다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 훈 중위 사건이 다시 자살로 결론지어졌다고 다른 사건들도 그렇게 처리될 것으로 단정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국방부의 재수사 의지에 기대를 걸었던 유가족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을 것은 틀림없다. 특조단은 이전 수사에서 고의적 인 축소·은폐 혐의는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성의를 다해 수

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평가를 하려 하지 않았다. 현장도 다 사라지고 관련자도 이미 흩어진 뒤에 사건의 진실을 밝혀낸다는 다짐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이번 수사는 잘 보여주는 것 같다.

이번 재수사를 통해 잃었던 신뢰를 되찾으려는 국방부의 뜻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타살의 혐의를 찾아냄으로써 젊은 나이에 저 세상으로 간 자녀의 한을 씻고 싶었던 유족의 가슴에는 더 큰 응어리가 쌓이게 됐을 것 같다. 이 와중에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나선 몇몇 언론기관은 명예훼손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 군 수사기관이 할 일을 제때 바르게 하지 못함으로써 빚어진 일들이다.(1999. 4. 14. 한겨레신문)

## 7. 국방부, 판문점 북 접촉 사건 김 중사 집행유예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4일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에 근무하면서 북측경비원들과 접촉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29)중사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죄(회합, 금품수수, 잠입탈출)와 무단이탈 및 명령위반죄를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중사가 중대장의 대북접촉 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북괴군과 접촉, 금품을 수수하고 월경해서 북괴군과 음주까지 한 것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군기강 차원에서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전과가 없고 구속기간중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중사는 판문점공동경비구역 부소대장으로 근무하던 97년 7월부터 12월 사이 상부에 보고 없이 북한군 적공조 요원들과 상습적으로 접촉,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었다. 이에 따라 김 중사는 1주일 이내에 본인 또는 군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전역 조치되면서 석방된다.

김 중사는 작년 12월 김 훈 중위 의문사와 관련, 타살 관련 용의자로 유가족과 언론 등에 의해 지목됐으나, 지난달 군 특조단이 김 중위가 자살했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혐의가 풀렸다.(1999. 5. 14. 조선일보)



## 8. “김 훈 중위 사망 국가책임 물을 수 없어”

지난 98년 2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내 병커에서 권총상을 입고 숨진 김 훈 중위가 자살인지, 타살인지는 명확히 가리기 어렵지만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31일 김 중위 유족들이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 왜곡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합조단이 김 중위의 자살동기나 권총 발사자세, 사고 현장 등을 조작했다는 유족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수사상 과실로 인한 국가의 손해책임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합조단이 사고발생 직후 현장실측을 하지 않는 등 초동수사가 미비했다”며 “합조단 수사결과에서 유류품의 위치와 격투·반항 흔적 유무, 알리바이 수사 등에 관해 증거판단에 적절하지 못한 면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증거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느 증거에 더 큰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타살과 자살을 각각 확신하는 측이 나뉘어져 있다”며 “새로운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진실 발견은 인간의 능력 범위를 벗어난 듯하다”고 덧붙였다. 김 중위 유족들이 항소할 것으로 보여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정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김 중위 및 군 의문사 관련자 유족들은 선고 직후 눈물을 쏟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한동안 절규했다.

유족들은 지난 99년 국방부 합조단이 공정성을 잃은 형식적 수사만으로 서둘러 자살 결론을 내렸다고 국가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2002.

1. 31. 연합뉴스)

## 제6장 법원판례 모음기사

### 자살을 유공자로 인정한 경우

#### 1. 자살 사병 유족, 국가 상대 손해소 일부 승소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합의3부 고영한 판사는 21일 상급자의 잦은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이모(20) 일병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2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의거, 군인 등이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에서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상 받을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자살한 경우는 순직에 포함되지 않기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숨진 이 일병이 상급자인 정모 대위로부터 잦은 가혹행위를 당해 참기 어려웠다 하더라도 이를 감독할 상관에게 알려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한 것은 적절한 대응방법이 아니다”라며 “국가는 군내에서 금지된 가혹행위 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기에 청구액의 30%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숨진 이 일병은 지난 1월말 자신의 상급자인 정모 중대장의 잦은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순찰근무 도중 갖고 있던 K-1소총으로 자살했다.(1999. 9. 21. 연합뉴스)

#### 2. “업무부담으로 자살한 장교도 국가유공자 인정”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김인수 부장판사)는 29일 공군에서 조종사로 근무하다 자살한 김모 소령의 부인 강모씨가 ‘남편이 업무 부담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



자살한 만큼 국가유공자 유가족으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 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능한 조종사로 인정받던 김씨가 부대를 옮긴 후 교육용 훈련기 조종에 적응하지 못해 교관 자격시험에서 탈락한 뒤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것이 인정된다"며 "관계법 시행령은 '자살은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김씨가 업무부담으로 자살한 만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95년 10월 남편이 부대를 옮긴 후 업무부담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이듬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도 국가유공자 유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2000. 5. 29. 연합뉴스)

### 3. "기합으로 정신질환 군인도 국가유공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31일 문모(35)씨가 군 복무기간중 고참병 등의 기합과 따돌림으로 정신질환이 생겼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 유공자 비대상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신이 모두 건강한 상태로 입대한 원고가 뚱뚱한 몸 때문에 신병 훈련 과정과 자대배치 후 상급자 및 고참병들이 기합을 주고 고문관 취급을 하며 각종 훈련과 행사에서 열외 시키자 이를 못 이겨 우울증이 발병, 자살까지 기도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군 복무기간 발병한 정신질환이 전역 후에도 계속 후유증을 남기고 있어 정신질환과 군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86년 4월 군에 입대한 문씨는 비대한 몸 때문에 구보와 행군에서 낙오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부대에서 고문관 취급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자 같은 해 7월 자살을 기도했으며 두 차례 군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87년 4월 의병전역한 후 북부보훈지청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2001. 5. 31. 연합뉴스)

### 4. "가혹행위 탓 자살병사는 국가유공자"

선임병 등의 폭언과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26일 육군 모 포병부대에서 복무 중 자살한 엄모 이등병의 어머니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엄씨의 사망은 선임병 등의 가혹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 이 같은 가혹행위는 부대에 전입한 지 얼마 안된 엄씨가 감내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된다"며 "따라서 엄씨는 군인으로서 직무수행중 숨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엄씨는 재작년 3월 포병부대에 전입, 조종수로 근무하던 중 선임병으로부터 포사격 절차 등에 대해 암기를 강요당하고, 욕설과 구타에 시달리다가 '선임병의 횡포가 싫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부대 야외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2002. 5. 26. 연합뉴스)

### 5. 군내 구타 못 이겨 자살, 국가유공자 인정판결

선임병 등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들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달아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27일 해병대 모 부대에서 휴가를 나왔다가 자살한 신모 이등병의 부친이 의정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유족등의 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인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자해행위로 인해 숨진 경우에는 '순직 제외' 사유에 해당하나 신씨의 자살행위는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써, 절망감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직무수행과도 관련이 있어 순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재작년 6월 해병대 모 부대에 전입, 보급행정병으로 근무하던 중 선임병으로부터 '내무실 청소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거나 '모기장을 잘 못쳤다'는 이



유 등으로 폭행당하고, 산개구리·지렁이 등을 먹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다 ‘입대 1백일’ 위로휴가 마지막 날 여관에서 음독 자살했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도 지난 5월 육군 모 포병부대에서 복무중 선임병의 가혹행위 등에 시달리다 자살한 엄모 이등병의 어머니가 서울북부보훈지청 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었다.(2002. 9. 27. 연합뉴스)

## 6. “해외근무 우울증 악화 자살도 공무상 재해”

공무수행중 과로 및 스트레스로 발병한 우울증이 해외 근무지에서 악화돼 자살했어도 공무상 재해로 간주, 해당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15일 지난 99년 주프랑스 대사관 문화관에 파견근무중 투신자살한 박모씨의 미망인이 낸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프랑스 문화원 파견근무 전에 한국에 있는 집을 처분한 상태에서 파견일자가 연기되는 등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증세를 보였고, 프랑스에서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문화원의 부족한 인력으로 인한 격무에 시달리다 자살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81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박씨는 문화관광부에서 근무하던 99년 주프랑스 한국대사관 문화원의 문화홍보관으로 파견됐다가 5개월 만에 파리의 숙소에서 투신자살했다.(2002. 11. 15. 연합뉴스)

## 7. “입대 2주 후 뇌졸중도 국가유공자 해당”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20일 입대 2주만에 발병한 것은 군사훈련과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모(20·시흥시 정왕동)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교 졸업 후 곧바로 군에 간 이씨는 고교시절 건강하

였고 선천적으로 뇌졸중을 일으킬만한 신체적 결함요소가 없다고 전문의사도 판단했기 때문에, 입대 2주일만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것은 군사훈련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해병대에 지원입대한 지 2주만인 지난해 7월 2일 아침구보와 행군, 장갑차 탑승 훈련을 2시간여 동안 하다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의병제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처가 다른 병사들보다 과중한 업무를 했다는 기록확인이 불가능하고 발병이 군사훈련과 무관하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2002. 11. 20. 연합뉴스)

## 8. “군대서 ‘왕따’로 자살 병사에 국가배상”

군대 내 동료들의 ‘왕따’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병사의 유족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군복무중 자살한 서모 이병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대사회의 폐쇄성을 고려할 때 선임병들의 폭언 및 같은 부대원 들의 따돌림 등이 주는 피해는 매우 크다”며 “부대 선임병들은 서 이병이 군대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과 따돌림을 일삼아서 이병이 ‘소속 부대원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시달리게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대원들의 따돌림이 서 이병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서 이병도 이를 참고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끝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한 점 등을 고려, 피고의 책임을 청구액의 일부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난 99년 육군에 입대한 서 이병은 제작년 1월 행군에서 낙오해 내무반 고참으로부터 폭언을 들은 다음날 부대 인근 야산에서 목을 매 자살했으며, 이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행정소송으로 국가유



공자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고, 유족들은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2002. 12. 29. 연합뉴스)

## 9. 동반자살 군인, 유공자 인정

지휘관인 예비군 면대장의 폭언과 가혹행위를 못 이겨 동반자살에 이른 두 사병을 국가 유공자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단독 김재협 부장판사는 27일 지휘관의 가혹행위 등을 견디다 못해 동반 자살한 이모·임모 일병의 가족 4명이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대장 최모씨가 지휘관으로서 훈계나 교육의 한계를 넘어 욕설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 이 일병 등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게 된 동기를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일병 등이 ‘부대근무가 괴롭고 최씨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자주 했고 급기야 ‘최씨를 증오한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긴 후 음독사 했다는 점에 비춰 가혹행위와 자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2000년 9월 모 보병사단 면중대에 전입한 이 일병 등은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 등으로 면대장 최씨로부터 수시로 폭언과 함께 구타에 시달리자 이듬해 3월 유서를 남긴 뒤 농약을 마시고 동반자살했다.(2003. 1. 27. 연합뉴스)

## 10. “군복무중 질병전이 사망도 국가유공자”

군복무중 생긴 질병이 다른 병으로 전이돼 사망한 경우 전역후 사망하기까지 장기간 시간이 지났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8일 “월남전에서 앓은 폐농양이 뇌농양으로 전이돼 남편이 사망했다”며 부인 이모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 비대상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역후 사망까지 17년의 간격이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춰

군복무중 상처가 사망원인이 됐는지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며 “하지만 뇌농양의 주요 원인병소가 ‘폐’에 있고 폐농양 외에 다른 원인이 있었다고 보기 힘든 점, 사망당시 진료의 진술 등으로 볼 때 폐농양이 악화돼 뇌농양으로 전이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64년 7월 월남전 참전중 포탄 파편에 맞아 우측 폐를 다친 남편이 완치가 안된 상태에서 67년 의병제대한 뒤 84년 뇌농양으로 사망하자 참전 시 당한 상처 때문이라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2003. 2. 18. 연합뉴스)

## 11. “군내 가혹행위로 자살 병사 병사 국가배상”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26일 군복무 중 자살한 강모 이병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4천4백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대사회의 폐쇄성을 고려할 때 선임병들의 폭행 등이 주는 피해는 매우 크다”며 “부대 선임병들이 강 이병이 군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행을 일삼아 강 이병이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대원들의 따돌림이 강 이병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강 이병도 이를 참고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을 청구액의 2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육군에 입대한 강 이병은 부대 고참들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그 해 9월 부대내 교육장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2003. 4. 26. 연합뉴스)



## 자살의 경우도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경우

### 1. “업무스트레스 자살 장교 국가유공자 아니다”

군에서 직속상관의 질책 등으로 받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장교는 국가유공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단독 심태규 판사는 2일 군복무중 업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군무지를 이탈,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모 중위의 아버지(58)가 대전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중위가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상관의 질책을 듣는 등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던 점이 자살의 한 원인이 됐다고 볼 수는 있지만 군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질책은 필요불가결하고 김 중위가 받은 스트레스는 장교로서 마땅히 극복하거나 견디는 등을 통해 해결될 정도의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휘관의 지휘관리 잘못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주장이나 증거가 없으므로 김 중위의 자살이 지휘관의 관리소홀이나 가혹행위 때문에 정상적이고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결국 김 중위는 자해로 사망한 만큼 순직군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997년 3월 해군사관후보생으로 입대한 김 중위는 1998년 9월 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으며 이에 아버지는 군부대의 관리 소홀이나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일 가능성이 높으며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2003. 7. 2. 연합뉴스)

### 2. “군복무 부담 자살, 공무 사망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12일 군복무 부담 때문에 자살한 육군 장교의 부친이 ‘아들이 공무상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며 의정부 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들의 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

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업무부담이 힘들었던 점은 인정되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사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원고의 아들 이모씨는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1월 중대장으로부터 반기집중 정신교육 점검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긴장감과 강박관념으로 고민하다 아버지와 장교 동기생에게 전화해 “부대생활이 힘들어 떠나고 싶다”고 울먹이는 등 어려움을 토로했으며 통화 다음날 원주시 모 성당 앞 정자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2003. 7. 12. 연합뉴스)

### 3. “군복무중 자살 국가유공자 안돼”

통제된 군생활에 대한 염증 등으로 인한 비관 때문에 자살한 군인은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25일 지난 91년 해군에 복무하다 자살한 이모 씨의 어머니 김모(53)씨가 마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아들이 군대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통제된 군생활에 대한 염증 등으로 인해 세상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보여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아들이 지난 91년 4월 해군 모기지 헬기장에서 목을 매 자살하자 군대가혹행위로 인한 자유로운 상태의 자해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지청이 비해당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2003. 7. 25. 연합뉴스)